

한국수화 관련 법령 제정 연구

책임연구원	우주형
공동연구원	김칠관
	박종운
	윤병천
	홍성은

문 화 체 육 관 광 부

한국수화 관련 법령 제정 연구

책임연구원 우주형(나사렛대학교 재활연구소 소장)
공동연구원 김칠관(나사렛대학교 대학원 외래강사)
박종운(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윤병천(나사렛대학교 수화통역학과 교수)
홍성은(독일함부르크대 수화언어학 박사)

보조연구원 박정현(서울대대학원 박사과정)
김종민(나사렛대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이현화(나사렛대재활복지대학원 석사과정)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귀 부와 계약한 「한국수화 관련 법령제정 연구 용역」에
관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연구책임자 :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재활연구소장)

개 요 (국문)

◇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범위

유럽 등 최근 여러 나라에서는 법제도를 통해 소수공동체 언어로서 수화의 공인은 물론 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화언어의 법률적 환경 조성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2006)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이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수화언어의 공인은 이제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언어의 인권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 수화와 농문화 역시 그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에 언어로서 한국 수화와 농인공동체의 실체를 인정하고, 한국수화와 한국수화 사용자들의 지위와 권리를 법률로 인정하며 보장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한국수화 관련법 제정 필요성
- 국내외 현황 조사 분석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주요 정책 의견 수렴
- 법률안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 법률안에 관한 조문별 입법이유서의 마련

◇ 선행연구 고찰 및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실시

풍부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수화의 언어로서의 특징을 밝히고, 수화언어의 습득과 사용에 있어서의 언어적 환경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수화의 언어적 지위와 수화사용자들의 언어권 신장을 위한 법률 제안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수화 관련법 제정 연구를 위한 학계 및 현장전문가 등 총 21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고 분석하였으며, 이를 법률안 연구의 내용과 방향에 적용하였다. 책임연구자의 진행으로 FGI 질문지의 질문들에 대해서면 답변과 함께 형식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들었으며, 인터뷰 내용은 수화통역, 문자통역, 녹음, 수기 등의 형식으로 정리 후, 본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 수화 관련 법령 현황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접근 및 편의제공을 위한 수화통역을 중심으로 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국어기본법」에서는 언어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립의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수화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국어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국의 수화 관련 법령현황을 살펴보면, 수화의 공인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은 유럽에서부터 일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중반 「슬로바키아농인의 수화에 관한 법률」과 「체코 수화언어법」과 「아이슬란드어와 아이슬란드수화의 지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스웨덴, 핀란드 등에서 자국 언어법의 틀 속에서 수화언어의 공인과 사용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의 수화언어 관련 특별법은 주로 장애인권리협약 성립을 전후하여 이루어진다. 뉴질랜드수화언어법(2006)과 니과라과수화언어법(2008)이 대표적이다. 특히 말레이시아장애인법(2008)은 종합법이면서도 수화언어의 공인과 사용자들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 가칭 「한국수어법」 입법안

○ 입법배경과 법률안 제정의 이유

국가는 언어생활을 통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헌법 제10조). ‘한국수어법’ 제정은 농인의 언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농인의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며, 언어권 보장은 그들의 인권보장뿐 아니라 언어를 근간으로 하는 문화 보전 및 발전의 기본조건이 된다. 언어로서의 수어를 인정함으로써 한국수어의 보급·발전과 농인의 교육·사회·문화 등의 모든 생활영역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 농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를 증진시켜나가야 한다.

○ 법률안의 주요 내용

「한국수어법안」의 주요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수어를 농인의 공용어로 규정하였다.

둘째, 법률 적용 대상자를 구체화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이 아닌 언어적 주체로서 농인을 정의하였다.

셋째, 농인의 언어권 보장을 바탕으로 하여 농사회·문화가 인정되고 발전

하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였다.

넷째, 농인의 언어권 보장에 관한 기본이념 및 원칙을 천명하였다.

다섯째, 수어에 대한 체계적인 언어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어의 유지·발전을 위해 농인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마련하였다.

○ 시행령안 등

한국수어법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실태조사의 세부 사항, 한국수어심의회의 기능 및 위원 구성 규정, 교육과 수어 관련하여 농학교에서의 농인 교사 또는 한국수어 사용 교육이 가능한 교사의 배치 기준과 방법, 교육과정 적용기준, 한국수어에 의한 학습 지원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 제작 및 보급, 교사와 학부모의 한국수어 사용 능력 향상 지원 등 이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법, 한국수어교원 양성 등에 대한 사항,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인증, 수어통역센터에 관한 규정, 한국수어의 날 기념, 권한의 위임·위탁 등을 제시하였다.

◇ 기대효과

「한국수어법」 제정은 수어 사용 환경을 변화·발전시키고, 농인의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한국수어의 법제도적 환경 마련
- 농사회의 농문화 정체성 변화 견인
- 농인의 언어권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인한 교육환경 변화 기대
- 농인들의 언어권 및 문화 향유권 등 기본적 권리 신장

Legislation Research Concerning Korean Sign Language

Summary of the report

◇ Introduction

In Europe, New Zealand, Uganda, South Africa and other countries sign language as a language of a minority is not only recognized officially, but guaranteed as the language of the Deaf. Such legal circumstances are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6), which Korea has ratified as well.

The legal recognition of sign languages has been accomplished in many different areas of the world. And it is connected to the issue of Linguistic Human Rights. Therefore Korean Sign Language and Korean Deaf Culture must have a legal status.

As a legislate study the goal is to improve the language environment of sign language based on the legal status and recognition as a true language and to support the culture of the Deaf, increase the education of the Deaf and their information access.

Through the study of preceding research it was possible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sign language as a language and to analyze the influence of language environment in terms of acquisition and use of sign language. Besides there have been efforts to provide a foundation of a legislation proposal, which increases the awareness of the linguistic status of sign language and strengthens the language rights of sign language users.

The research project interviewed 21 academic and field experts for the legislation research concerning Korean Sign Language. The interviews have been analyzed and the results have been contributed to the research content and direction of the research.

◇ Current situation of sign language legislation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guage states that it is the duty of the state and the local administration to provide support to citizen who have difficulties in using the Korean language. This act doesn't apply to

sign language, but only the oral Korean language.

A look to foreign sign language legislation shows, that the recognition of sign language and related legislative regulations started in Europe. In the middle of 1990 sign language legislation were ratified in Slovakia, Czech Republic and Island. Furthermore Sweden, Finland and other countries recognize sign language and the right of sign language users in their national language act.

Outside Europe there are sign language legislation, which mostly were established shortly afte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ign Language Act of New Zealand (2006) and Nicaragua (2008) are a representative case. In Malaysia there is no separate sign language legislation, but sign language and the rights of sign language users is recognized within the Ac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Major points of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Major points of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are as following:

First,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states Korean Sign Language as the language of the Deaf

Second,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specifies the target group by defining the target group not as deaf people who rely on interpreting service, but as a linguistic group.

Third, by guaranteeing the linguistic rights of the Deaf the culture of the Deaf is recognized as well and serves as a institutional stepping stone .

Fourth, the Korea Sign Language Act gives a basic idea and a basic principal of linguistic rights of the Deaf.

Fifth,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gives a systematical foundation on the language policy of Korean Sign Language.

At last,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has stated concrete regulations in the area of deaf education in order to protect and flourish the use of sign language.

◇ Conclusion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will promote the environment of sign language use and gives the legal foundation to increase the human rights of the Deaf. This study adduce following expectations:

- Providing a legal environment for Korean Sign Language
- Change of the identity of deaf society and deaf culture
- Change of education environment thanks to the legal guarantee of the linguistic rights of the deaf
- Increase of the linguistic rights, freedom rights and basic rights of the Deaf

차 례

제출문

개 요 (국문 / 영문)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1. 연구의 필요성	1
1.2. 연구의 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4
2.1. 연구범위	4
2.2. 연구방법	5
2.3. 연구경과	7
3. 선행연구 고찰	10
3.1. 언어로서의 수화의 특징	10
3.2. 수화언어의 습득과 사용	14
4. 용어의 정의	19
4.1. 농인	19
4.2. 농인공동체	19
4.3. 수화언어	19
4.4. 농문화	20
4.5. 유사수화체계	20

II. 이론적 배경

1. 농인공동체와 농문화	21
1.1. 개관	21
1.2. 농문화의 위상	23
2. 농 정체성과 언어권 보장	24
2.1. 농인과 정체성	24
2.2. 언어권 보장	27
3. 수화언어의 법적 지위 고찰	35
3.1. 인권과 언어권	35
3.2. 국제인권으로서의 언어권	36
3.3. 헌법과 언어권	39

Ⅲ. 수화 관련 법령 현황

1. 우리나라의 법령 현황	42
1.1. 장애인복지법	43
1.2. 장애인차별금지법	44
1.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45
1.4. 국어기본법	46
1.5. 기타 - 장애인 인권선언문	46
2. 외국의 법령 현황	46
2.1. 배경	46
2.2. 개별 법령 현황	48
3. 비교법적 고찰	58

Ⅳ. FGI 분석

1. FGI 진행 경과	61
1.1. FGI 실시방법	61
1.2. FGI 질문지	61
2. FGI 분석 결과	61
2.1. 조사 대상자	61
2.2. 코딩분석 결과	62
2.3. 범주별 분석 결과	63

Ⅴ. 가칭 한국수화법 입법안

1. 입법배경	71
1.1. 농인의 언어권 보장	71
1.2. 농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	71
2. 법률안의 제정이유	72
3. 법률안의 구성과 주요내용	72
3.1. 법률안의 구성	72
3.2. 법률안의 주요내용	72
4. 입법이유서	75
4.1. 법률안의 구성 체계	75
4.2. 법률안의 주요 특징	75

4.3. 조문별 입법이유 및 해설	76
--------------------------	----

VI.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1. 시행령안	90
1.1. 실태조사의 세부사항	90
1.2. 한국수어연구소 및 한국수어교육원	91
1.3. 한국수어심의회	92
1.4. 교육과 한국수어	94
1.5. 한국수어교원 양성 등	95
1.6. 수어통역 등	96
1.7. 한국수어의 날	98
1.8. 권한의 위임·위탁	99
2. 시행규칙안	103
2.1. 한국수어심의회에의 농인 위원 비율	103
2.2. 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 등	104
2.3. 교육기관의 범위 지정	106

VII. 결론 및 제언

1. 수어의 법적 지위 보장	109
2. 농인의 인권환경 및 정책 변화 기대	110

참 고 문 헌	111
---------------	-----

부 록

법률초안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1.1.1. 국제환경의 변화

1980년대 이후 농인의 수화 관련 논의는 수화는 음성언어와 다른 독자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수화를 모어로 하는 농인공동체를 인지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언어학을 바탕으로 한 미국수화 연구(Stokoe, 1960)를 비롯하여 사회언어학의 연구 성과는 농인과 농인공동체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이끌었다. 임상적·병리적 관점에서 문화적 관점으로의 변화(Baker-Shenk 등, 1999[1980]:54-55에서 재인용)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농인의 수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이어짐으로써 미국농교육위원회 보고(1988:43)에서는 모어가 미국수화이므로 영어 운용능력에 제한을 받는 아동들에 대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수화를 「소수공동체 언어(minority language)」로 본다.

소수공동체 언어로서 수화가 보다 구체적이며 실질적으로 드러난 것은 플렌스부르크 권고(François Grin 등, 2000)였다. 이 권고에서는 새로운 항목을 덧붙이면서까지 유럽의회는 물론 그 밖의 국제기구로 하여금 수화언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수화언어와 그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수단을 갖출 필요성을 호소한다. 이 권고 이후 유럽 의회는 거의 모든 소수공동체 언어와 관련된 정책과 권고에 수화언어를 포함시키기에 이른다. 이에 유럽연합 회원국 중 수화언어를 공인하지 않은 국가는 없다. 이미 1990년대에 성립된 슬로바키아의 수화 관련 법(1995), 체코의 수화법(1998)을 비롯하여 슬로베니아의 수화 사용 관련 법(2002), 헝가리수화 관련 법(2009), 아이슬란드의 수화 관련 법(2011) 등 분리 입법을 통한 법률 이외에도 헌법, 언어법, 교육법 등 여러 형태의 법률적 장치를 통해 소수공동체 언어로서 수화의 공인은 물론 사용자로서 농인들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있다. ICF¹⁾(2001)에

1) 제54차 세계보건회의가 승인(2001)한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수용·표현활동에서 음성언어와 수화(formal sign language)를 동등하게 인정함으로써 수화언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유럽 지역 이외에도 우간다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헌법을 통해 수화언어를 공인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 교육 관련 법률을 통해 일찍부터 소수공동체 언어 정책을 확립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등의 북미 지역, 뉴질랜드수화법(New Zealand Sign Language Act 2006)을 포함하는 오세아니아 지역, 베네수엘라, 브라질, 니카라과 등의 남미 지역, 말레이시아를 필두로 하는 아시아 지역 등 수화언어의 법률적 환경 조성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수화언어와 관련한 이와 같은 세계적인 환경 변화의 중심에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2006)이 있다. 한국은 이 협약을 비준²⁾한 바 있다.

1.1.2. 국내환경의 변화

농인의 수화가 음성언어와 대등한 독자 체계를 지닌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공인하는 세계적인 환경 변화를 통해 볼 때, 수화언어 및 수화언어공동체에 대한 한국에서의 인식은 그와 같은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그 까닭은 수화언어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국내의 법률적 환경에서 오는 문제가 주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성립과 한국의 비준은 국내의 인식과 법률적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고 있는 언어로서의 농인의 수화에 대한 인식은 어디에서도 명시적으로 드러난 바 없다. 이와 같은 환경이 수화통역과 관련된 최근의 국내법으로 이어짐으로써 수화언어의 실체를 호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 같은 단순한 의사소통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같은 「환」을 명시(제3조 제8호 나목)하고는 있으나 언어 또는 비언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특수 대과정(2011, 시안고)이 제시하고 있는 「환」 다양한 의사소통 중의 하나로 한국어 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법률은 수화 관련 실태를 인정한

health: ICF) 제3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수용과 표현을 위한 일반적이거나 특수한 자질들을 제시하고 있다(WHO, 2001/上田, 2001; 高田, 2001).

2) 한국은 2008년 12월에 국회에서 비준하고 2009년 1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국내법과 저촉된다는 이유로 협약 제25조 마항(생명보험 관련 조항)은 유보한 상태이다.

다고는 할 수 있으나, 언어로서의 한국수화와 이것을 핵심으로 하는 농문화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수화언어의 이와 같은 법률적 지위의 불안정성은 농인의 언어 관련 실체를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연이와 같은 한국수화와 한국어를 바탕으로 하는 수지체계(예컨대 한글식 수화리구제 일한 것으로 혼동하는 것 같은 현상이 그러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왜곡 현상은 언어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농인공동체에 대한 관점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수화언어에 대한 매우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그것은 전체 내용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제2조(정의) 언어의 정의에서는 수화언어(Signed Language)를 음성언어와 동등한 것으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비음성적 언어형식과도 구분하고 있다. 제9조(접근성)에서는 농인의 접근성을 위한 전문수화통역사의 배치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제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의 적절한 조치에서도 수화언어의 사용 인정과 증진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제24조(교육)에서는 수화 학습 촉진과 농인공동체의 언어 정체성 증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0조(문화생활 등)에서는 장애인들의 특수한 문화와 언어 정체성을 제시하면서 수화언어와 농문화를 특별히 부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수화언어는 전반적인 내용에서 커뮤니케이션 또는 언어로서 언급되고 있다. 이는 수화언어의 독자성뿐만 아니라 수화언어를 핵심으로 하는 농인공동체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제 수화언어의 공인은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인간의 다양성과 인간성의 일부로서 장애인권리협약(일반원칙)이 밝히고 있는 차이의 존중과 수용을 의미하며, 그것은 언어의 인권(Linguistic Human Rights)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 농인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발전해 온 한국수화와 농문화는 그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는 장애인권리협약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이며, 이 연구는 의무로서의 법적 조치를 위해 필요하다.

1.2. 연구의 목적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화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적 배경,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한국수화의 성립과 전개는 소수공동체 언어로서 한국수화의 지위를 새롭게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한국수화와 문화의 집합체로서 농인공동체와 개별 구성원들의 언어·문화적, 교육적, 사회적, 심리적 제반 문제를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언어로서 한국수화와 농인공동체의 실체를

밝히고, 한국수화와 한국수화 사용자들의 지위와 권리를 논의함으로써 이를 법률로 인정하며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로서 수화의 실체를 밝힌다.

둘째, 농인공동체와 농문화의 실체를 밝힌다.

셋째, 수화 사용자들의 권리를 논의한다.

넷째, 한국수화 관련 입법의 기반을 구축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2.1. 연구범위

이 연구의 대상인 한국수화는 음성언어인 한국어와는 다른 언어형식을 지니는 언어로서 한국 농인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정의한바, 수화(Signed Languages)는 음성언어와는 다른 언어형식을 지니는 언어로서의 개별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농인들의 교육권, 사회권 등 인권은 제1언어 또는 모어로서 언어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화는 농인의 제1언어로서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그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수화의 언어적 지위를 확보하고 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수화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 환경 개선 및 농인의 문화·정보 접근권 등을 신장할 수 있는 제정 법안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가칭)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필요성
- 국내외 현황 조사 분석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주요 정책 의견 수렴
- ‘(가칭)한국수화언어기본법’ 및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 법률안에 관한 조문별 입법이유서의 마련
- 입법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 제공과 논리적 대응 등 후속 지원

본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농인에 대한 언어·문화적 관점에서 농인을 언어적 소수집단으로 이해하

여 접근하고자 함.

- 한국농아인협회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가칭 ‘수화언어기본법’안과 해외의 법(안)을 바탕으로 비교법적인 관점과 한국 농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하고자 함.
- 농정체성을 바탕으로 하고, 농인과 청인이 함께 살아가는 이중문화 정체성의 관점에서 새로운 농교육 환경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에 맞는 언어정책을 제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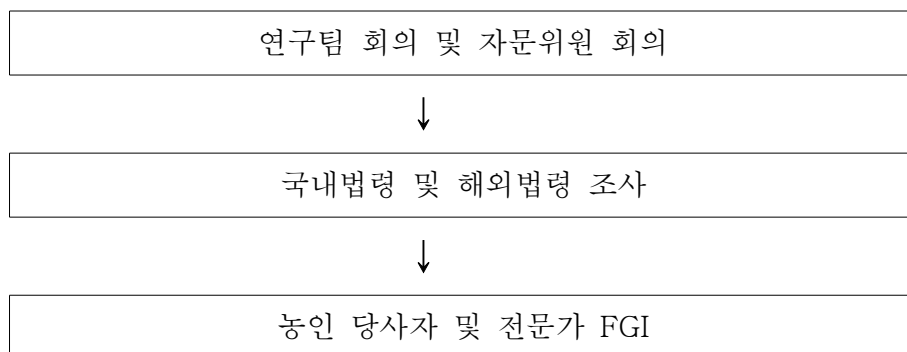
2.2.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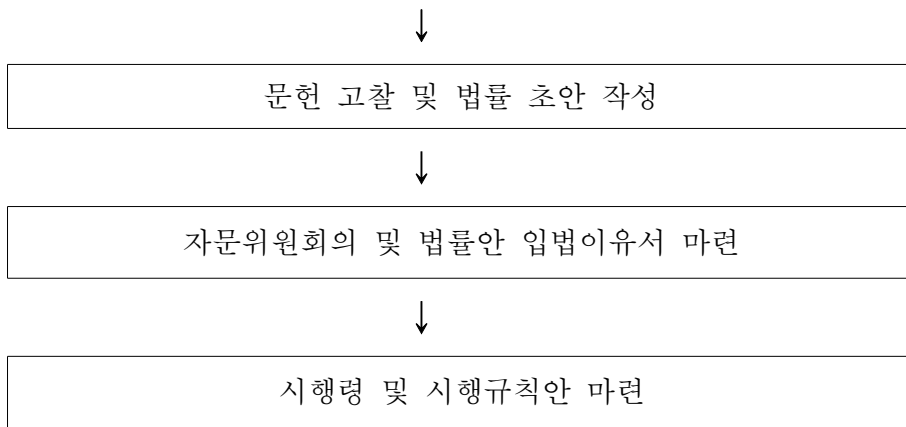
본 연구는 다음의 수행전략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 농인에 대한 관점과 환경 변화 분석
- 농인당사자와 수화분야 전문가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실시
- 국내외 관련 입법사례 조사 및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언어로서 한국수화의 인지, 수화 습득 및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가칭 ‘한국수화언어기본법’안 제시
- 법률안의 조문별 입법이유서 마련
- 법률안을 바탕으로 후속작업으로서의 시행령·시행규칙안 마련

본 연구에서는 농인당사자 및 현장실무자의 경험적 근거와 전문가 등의 견해를 통하여 수화언어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도출해 내기 위해 포커스그룹 인터뷰(집중인터뷰, FGI)를 실시하고자 한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농사회와 농문화, 농정체성, 농인의 언어권 보장, 수화언어기본법의 필요성과 이유, 수화언어의 법적 지위, 수화언어기본법에 담아야 할 내용 등에 관해 의견을 수렴한다. 조사과정은 FGI 형식(질문을 통한 대화 및 토론)으로 진행하며, 진행된 모든 내용을 자료화한다.

본 연구의 과정흐름도를 나타내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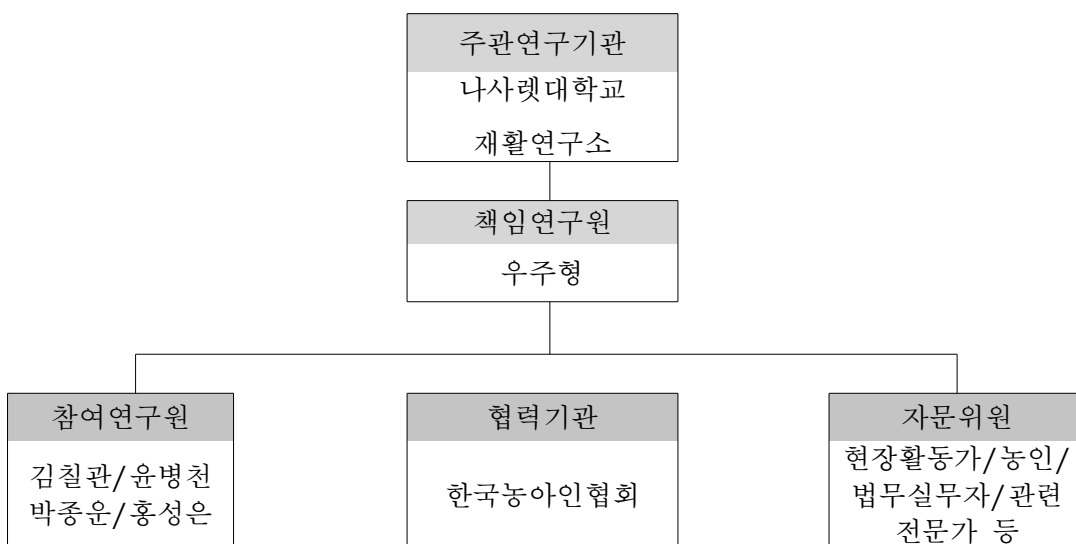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과정흐름도

(1) 수화 관련 전문가 및 학자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2008년부터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추진한 수화언어기본법 제정추진 TFT에 참여한 경험을 중심으로 보다 내실 있는 연구를 기대할 수 있는 연구진으로 구성하였다.

(2) 자문위원을 법제실무전문가, 현장실무자 및 농인단체활동가 등으로 구성하여 연구 시작단계부터 연구의 방향과 그 과정에 충분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본 연구의 연구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 나사렛대학교 재활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수행하되, 수화 관련 전문가 및 학자와 법률가를 연구진으로 구성하며, 농아인단체활동가 그룹, 현장실무자, 농인당사자들이 참여한 FGI를 운영하고 그밖에 자문회의, 연구팀워크숍 등을 통해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폭넓게 의견을 수렴함.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2.3. 연구 경과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결과 및 현황을 참고하였으며, 한국수화 관련 학자 및 현장전문가의 자문과 연구진 회의를 통하여 연구방향과 연구방법 그리고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수행과정에서 얻은 주요회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수화 관련 법령 제정 연구’ 연구진 1차 회의

일시	2013. 5. 22. 18:00 ~ 20:00
장소	서울역 회의실 - KTX 6호실
목적	‘한국수화 관련 법령 제정 연구’ 진행 방향 및 구체적 계획 논의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형, 윤병천, 홍성은, 박종운, 박정현, 이현화, 김종민 · 참관인 : 강미영(문화체육관광부 연구사), 이미혜(농아인협회 사무처장)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분야별 역할분담 본 연구의 각 분야별 역할을 연구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론적 배경, 수화 관련 법령현황, FGI 실시, 수화 관련 외국법의 사례, 입법안 등으로 나누어 담당하기로 하고 이를 취합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기로 함. · 연구진행 일정 연구진행과정의 일정을 논의하고,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논의사항들을 온라인을 통하여 수시로 공유하기로 함.

○‘한국수화 관련 법령 제정 연구’ 착수보고회 및 자문회의

일시	2013. 5. 30. 11:00 ~ 13:30
장소	고궁박물관 고궁뜨락 내 회의실
목적	연구개요, 연구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자문회의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위원 : 변승일, 이미혜, 김동범, 손원재, 이상용, 김경진 · 연구팀 : 우주형, 윤병천, 김칠관, 홍성은, 박정현, 이현화, 김종민 · 참관인 : 강미영(문화체육관광부 연구사), 이미혜(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수보고회 연구진행 전반에 걸쳐 목적과 연구범위, 연구수행전략 등을 자문단과 공유, 착수보고회를 겸한 자문단회의 진행 ·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 한국수화 관련 학계 및 현장의 주요 인사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법률명, 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과 같은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 이를 연구수행에 적용하기로 함.

○ ‘한국수화 관련 법령 제정 연구’ 연구진 2차 회의

일시	2013. 6. 7. 금 12:00
장소	박종운 변호사 사무실
목적	FGI 참여자 명단 및 질문지 내용을 정하고, 이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 논의
참석자	· 우주형, 김칠관, 윤병천, 홍성은, 박종운, 박정현, 이현화, 김종민 · 참관인 : 강미영연구사(문화체육관광부 연구사)
내용	· FGI 시행 계획 참여자 명단 - FGI참여자 총 22명으로 함. - FGI 분야별 대상자 · FGI 질문지 내용 검토 및 조정 · 기타 추후계획 논의

○ ‘한국수화 관련 법령 제정 연구’ 연구진 3차 회의

일시	2013. 6. 20. 목 10:00
장소	법무법인 소명
목적	연구경과 및 진행사항 점검, 기타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
참석자	· 우주형, 김칠관, 윤병천, 홍성은, 박종운, 박정현, 이현화, 김종민 · 참관인 : 강미영(문화체육관광부 연구사), 이미혜(농아인협회 사무처장)
내용	· 연구경과 보고 및 추후 계획 제1차 연구진 회의 및 자문단회의 논의 사항을 보고하고, FGI 실시 등의 추후 계획에 대한 논의 · 법의 목적과 이념, 법 적용 대상, 법적 용어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

○ ‘한국수화 관련 법령 제정 연구’ 연구진 4차 회의

일시	2013. 6. 26. 수 10:00
장소	법무법인 소명
목적	법률초안 검토
참석자	· 우주형, 김칠관, 윤병천, 홍성은, 박정현, 김종민 · 참관인 : 강미영(문화체육관광부 연구사), 김현철(한국농아인협회 과장) · 문자통역 : 류연나
내용	· 법률초안 검토 : 법률초안을 마련하고 각 조항별로 검토 · 수정함.

○ ‘한국수화 관련 법령 제정 연구’ 연구진 5차 회의

일시	2013. 7. 4. (목) 10:00
장소	법무법인 소명
목적	법률초안 검토 및 논의
참석자	우주형, 김칠관, 윤병천, 박정현, 이현화, 김종민 참관인 : 강미영(문화체육관광부 연구사), 이미혜(농아인협회 사무처장)
내용	· 법률 초안 검토과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의 2차 초안 마련, 이를 발주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초안 마련하기로 함.

○ ‘한국수화 관련 법령 제정 연구’ 연구진 6차 회의

일시	2013. 8. 6. (화) 14:30
장소	법무법인 소명
목적	자문단 의견을 취합 · 적용, 법률초안 검토 및 수정 (자문의견 : 강현철, 박김영희, 변승일, 손원재, 윤석민, 이미혜, 한영수 등)
참석자	· 우주형, 김칠관, 윤병천, 홍성은, 박정현, 이현화, 김종민 · 참관인 : 강미영(문화체육관광부 연구사), 이미혜(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
내용	· 평가단 의견을 취합 · 적용, 법률초안 검토 및 수정 - 평가위원이 서면으로 법률초안에 대한 검토 - 평가단의 의견과 김칠관 연구자의 수정안을 포함하여 본 연구진의 최종 수정 등을 취합 및 재검토 - 용어 정의 및 개념 재정리 - 각 조항별 문맥을 검토하고 최종 정리 - 본 법률안의 취지 및 성격을 고려한 용어의 개념 및 적용 사항 검토 -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이 필요한 각 조항에 대한 개괄적 논의

○ ‘한국수화 관련 법령 제정 연구’ 연구진 7차 회의

일시	2013. 8. 26.(월) 13:30~15:30
장소	법무법인 소명 회의실
목적	법률초안에 대한 검토 및 예상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정리
참석자	· 우주형, 김칠관, 윤병천, 박정현, 김종민 · 참관인 : 강미영(문화체육관광부 연구사)
내용	· 법률안 최종 검토 - 법률명 및 용어에 대한 정의 확인과 법률안 최종 검토 논의 · 예상쟁점사항에 대한 논의 - ‘수화’가 아닌 ‘수어’로 명칭을 정하게 된 이유(한국농아인협회 설문결과를 근거로 한 자료로 요청하기로 함.) - 법안에서 정의한 각 용어에 대한 해설 정리(김칠관 연구원) - 한국수어권 주체에 대한 의견 정리 · 학부모와 농학교 교사들의 ‘농문화’, ‘수어’에 대한 이해 관련 자료 정리)

3. 선행연구 고찰

3.1. 언어로서의 수화의 특징

3.1.1. 수화 연구의 시작

19세기 중반과 20세기 초에 이미 농인의 수화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³⁾이 있었으나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수화 연구의 언어학적 접근은 20세기 중반 미국의 Stokoe(1960)에 의해 이루어졌다.

Stokoe의 이 연구는 수화(미국수화)가 내부구조를 지니는 언어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여기서 내부구조란 음운구조를 이르는 것으로, 수화 단어가 음소(그는 이것을 Chereme⁴⁾이라 한다)를 바탕으로 하는 구조를 지닌다는 것이다. 모든 언어에서 음소는 제한적인 것이며, 이들 제한적인 구성소를 바탕으로 무제한의 단어(형태소)가 생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화언어의 음운구조는 언어로서 보편성을 지닌다는 증거이다.

3.1.2. 수화언어학의 성립

미국수화의 후속 연구를 비롯하여 유럽에서의 수화 연구는 가히 수화 연구의 춘추시대라 할 만큼 언어구조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음운론은 자립분절 음운론을 바탕으로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운동-정지 모델(Movement Hold Model)」(Liddell과 Johnson, 1989)과 「자립 층열 모델(Hand Tier model)」(Sandler, 1989) 등이 그것인데, 특히 앞의 연구에서 특징적인 것은 계기적 분절 구조의 발견이다. 이들 연구를 통해 수화언어의 음운론적 과정을 기술하기에 이른다. 수화 음운론 연구에서도 음성언어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소론과 운율론으로 갈린다.

-
- 3) 19세기의 연구로는 Bebian의 「농인의 자연언어」(1817)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화의 표기 체계와 관련하여 단어를 그 구성요소로 분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비수지신호에 해당하는 얼굴 표정의 분석과 관련하여서도 기술표정의있다(Lane 편, 1984/石村 역, 2000:260-264). 20세기 초의 연구로는 Wundt(1900)에서 볼 수 있는데, 그는 제스처를 바탕으로 농인의 수화를 분석한 바 있다. 지시, 서술, 상징 등 제스처로 수화를 분류표정, 다시 서술 제스처는 모사·모방 등의 형식으로 분류한다(大杉, 2000:147-148). 그가 농인의 수화에 붙인 ‘Gebärdensprache’는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 4) Chereme에서 ‘cher’은 회랍어로 손을 의미한다. 이 용어의 번역어로 한국에서는 ‘수화소(手話素)’(김승국, 1983), 일본의 경우는 ‘동소(動素)’(神田, 1994)로 쓰기도 한다. 음소로서 chereme은, 수형, 위치, 운동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47개의 기본요소를 이룬다(후속 연구에서 그 수는 55개로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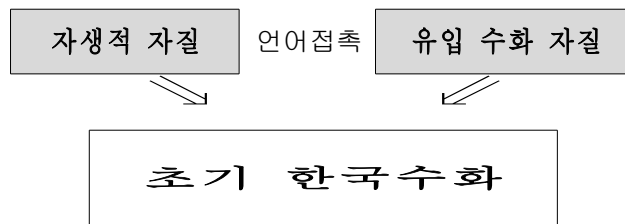
수화언어의 형태론적 구조와 형태론적 과정의 발견은 파생, 굴절 등을 바탕으로 한 단어 형성과 어형변화를 확인하는 중요한 바탕을 이루었다. 동사의 일치(verb agreement)와 분류사 구문(classifier construction)은 수화언어에서 중심을 이루는 형태론적 구성으로 본다(Meir 등, 2004). 특히 동사의 일치는 수화언어에서의 형태·통사론적 특징을 제기하는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통사론과 관련하여 특히 Sandler 등의 논의(2006:473)에서는 수화언어에서 음성언어와 같은 구조를 찾을 수 있는데, 특히 어순에서 그러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연구에서 비수지 표지(non-manual markers)의 중요성을 들고 있다. 구미(특히 미국) 수화 연구에서 특색적인 것은 통사론에서의 구절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연구이다.

3.1.3. 한국수화와 농인공동체

한국수화는 한국 농교육의 성립과 함께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농교육 성립 이전 그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농인은 존재하였을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주고받기 위해 시각·동작체계를 바탕으로 한 수단을 이용하였으리라는 예측은 어렵지 않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농인들이 비로소 집단을 이루는 계기가 된 학교사회를 지나치고는 한국수화의 성립을 생각할 수 없다. 학교사회는 농인들에게 있어 언어공동체를 이루는 발판이었고, 이것이 보다 큰 사회(농인공동체)를 이루는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언어공동체 이전의 개별적인 수단은 ‘가정에서만 통할 수 있는 제스처 커뮤니케이션’(home sign)⁵⁾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농인들의 언어공동체, 즉 농인공동체를 중심으로 공통화됨으로써 농인의 언어로 자리 잡게 되어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에 농교육의 성립 시기와 한국수화의 성립 시기를 겹쳐 보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김철관, 2009). 따라서 한국수화는 한국 내의 자생적 자질(흙사인)과 일본으로부터의 유입 자질이 접촉(언어접촉)함으로써 기층을 이루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철관, 1998:27-28; 2005:21-23).

5) 개별적으로 고립된 농인이 주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수단을 이른다. 특징으로는, 개인적이라는 것, 일반적 제스처와의 공통점이 많다는 것, 동작이 크다는 것, 감정표현으로서의 표정에 머문다는 것, 유창성이 없다는 것, 문맥 의존적이라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언어로서의 구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인의 수화언어와 구분된다(한연미, 2007 참조).



<그림 1.3> 한국수화의 성립(김칠관, 2005 참조)

한국 초기 농교육기관⁶⁾에서 수화는 교과과정상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평양맹아학교의 경우는 구화법에 근접한 방법⁷⁾을 도입하고 있었으므로 논외로 하더라도 제생원맹아부의 경우는 그와 달랐다. 제생원맹아부의 경우, 일부 교사나 학생들에 의해 수화가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조선총독부의 문서⁸⁾를 비롯하여 제생원맹아부를 중심으로 한 공적인 행사 등이 뒷받침하고 있다. 그 가운데는 조선맹아협회 농인 회원⁹⁾ 및 제생원맹아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수화강습」¹⁰⁾이 포함된다. 수화강습이 의미하는 것은, 한국수화의 체계적 이용이 1920년대까지는 이루어졌음을 입증(김칠관, 1998)한다고 하겠다. 이것은 농인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수화의 발전적 바탕이 됨으로써 「병어리극단」을 중심으로 한 연극 공연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1946년 창단한 이 극단은 「남모르는 세상」(1946년 초연), 「쓰라린 세상」(1949년 초연), 「성좌단(星座團)」(1950년 초연), 「붉은 기 땅에 떨어지는 날」(1950년 초연), 「배다른 형제」(1952년 초연) 등 일련의 연극 활동으로 이어졌다(침묵의 벗 편집부,

6) 한국 최초의 농교육기관은, 1909년(8.19) 구한국 학부의 인가로 새롭게 출발한 평양맹아학교와 조선 총독부에 의해 설치(1912.4.1)되고, 1913년(4.1) 이후 교육을 시작한 제생원맹아부이다(朝鮮總督府濟生院盲啞部, 1938; 金仲坤·金七官, 1985).

7) 평양맹아학교는 중국 치인(啓音)학교가 교육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던 시화법(視話法)을 도입함으로써 수화와 관련이 없었다(白樂濬, 1991[1973]:421-422; 孫桂華 외, 2007:115-116, 김칠관, 2009).

8) 「교수에서 일본(여기서는 내지)과 같은 방식의 점자와 수화를 사용함」(朝鮮總督府, 1915)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에서 수화는 수화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제생원맹아부에서의 수화 사용에 대한 실체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9) 제생원맹아부 졸업생을 중심으로 1921년 창설되었는데, 1933년 현재 농인 회원 수는 62명이다(朝鮮總督府, 1933). 이에 앞서 1920년에는 일본농아협회 조선지부가 이미 설립된 바 있는데, 여기서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는 구리다(栗田四郎)는 한 때 평양맹아학교 교원으로 재직한 바 있다(岩井, 2002). 「농아계(聾啞界)」(1939, 호수 미상)에 의하면, 지부 총회가 제생원맹아부에서 개최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조선맹아협회 농인 회원 중에는 이 단체 가입 회원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0) 1921년 창립된 조선맹아협회 농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수화강습회는 1924년에 2회 개최되었음을 확인(동아일보, 1924.2.19; 1924.3.15)할 수 있으며, 1928년에는 학부모 대상 수화강습회가 열렸던 것을 확인(知覽, 1928)할 수 있다.

1962:105-110; 계기훈, 1999:233). 농인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이와 같은 연극 활동은 언어로서 한국수화를 드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농인들의 수화 사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수화」(서울농아학교, 1963)를 통해 드러난 어휘체계의 바탕이 되었고, 이와 같은 결과는 국어(일본어→한국어) 중심 체제에서 이룬 것이라는 데서 더욱 값지다.

1980년대를 전후한 한국에서의 변화는 수화에 대한 청인들의 대중적 관심과 함께 나타났다. 「수화교실」, 「수화동아리」 등은 그와 같은 변화가 실질적으로 현재화한 것이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농교육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농교육을 중심으로 한 변화는 밖으로부터의 강력한 영향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 중심에는 토털커뮤니케이션¹¹⁾이 있었다. 「우리들의 수화」(문영진 편, 1979), 「표준수화사전」(標準手話辭典編纂委員會 編, 1982), 「수화사전」(金承國 編, 1983), 「사랑의 수화교실」(한국청각장애자복지회, 1988) 등은 한국수화의 어휘체계를 보다 폭넓게 망라한 이 시기의 대표적인 사전들이다. 이들 사전 편찬은 농인들이 중심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로써 어휘체계를 중심으로 한 한국수화의 일차적인 공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언어운용과 관련하여 한국수화는 전혀 상반된 방향의 갈림길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상반된 방향이란, 한국수화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하는 방향과 한국수화를 방법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방향 등을 이른다. 농인으로만 구성된 표준수화 선정위원회에 의한 수화사전¹²⁾ 편찬, 관용적 수화연구¹³⁾ 등과 함께 한국수화학회¹⁴⁾를 중심으로 한 연구 활동이 앞의 경우에 속한다면, 농학교 교육과정으로 드러난 수화의 방법적 이용과 이에 따른 연구 활동 등은 뒤의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수화의 방법적 이용은 음성언어의 어법을 바탕으로 한 유사체계로 드러난 바 있는데, 「한글식 표준수화」(1991)가 그것이다. 이 체계는 한국어 어법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서 농인들의 한국수화 운용에 일대 혼란을 조성하였다. 그것은 한국어를 일상의

11)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토털커뮤니케이션은 농교육에서 언어와 관련된 '아님'으로 등장한 것이었으나, 한국의 경우 하나의 '방법'으로 구체화됨으로써 수화가 한국어 교육의 도구로 전락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김철관, 2002, 2005 참조).

12) 이 사전은, 종교, 복지, 교육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농인공동체의 지도층 인사들로 구성된 표준수화 선정위원(강주해 외 11명)을 중심으로 선정된 2,000여 어휘를 표제어로 올린 「한국수화」(2001)이다. 서문에서는 수화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의 역기능을 우려하며 보다 바른 수화를 제시하고자 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13) 농인들의 관용적 수화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이종순(1996), 이준우(1997)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인들의 관용적 수화는 주로 강주해, 손천식, 손원재 등에 의해 단편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는데, 장진권(2004)에서 이를 집성한 바 있다.

14) 한국수화학회는 1994년 한국수화연구회로 출발하여 최근에 이르고 있는데, 회보 발행(9호까지), 연구지 발행(2호까지), 학술대회(연차 14회까지), 콜로키움 등을 통해 한국수화의 실체에 접근하여 최근에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한국수화연구회회보1호, 한국수화학회 회보7호 등 참조).

언어로 사용하는 청인이 농인보다는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수화언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농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1990년대 말 이후 한글식 수화를 비롯한 유사체계에 대한 비판((안성우, 1997; 김칠관, 1999b; 장진석, 2006))이 일기 시작했다. 특히 김칠관(1999b), 원성옥 등(2002)에서는 수화연구의 국외동향과 한국 수화의 구조적 특성을 제시함으로써 언어교육으로서 수화교육의 전향적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 한국수화 연구의 언어학적 접근은 국내 수화 관련 연구의 70%에 육박(윤병천, 2005)할 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수화언어를 중심으로 한 연구 성과는 농인공동체의 언어태도에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성립을 전후한 시점에서의 이와 같은 변화는 수화언어차별 법령 개정 운동(2005)으로 이어짐으로써 언어로서 한국수화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연구¹⁵⁾가 한국농아인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앞서 농인의 의사소통·정보 보장의 일환으로 일기 시작한 수화통역의 제도화 논의는 기초연구(김칠관 외, 1995)를 바탕으로 1997년 이후 한국농아인협회를 주체로 하는 민간자격으로 제도화하기에 이른다. 2006년에는 국가공인이 확정됨으로써 수화통역에 대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다(김칠관, 2001; 김칠관·윤병천, 2011b). 이것은 수화언어 및 수화통역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해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에는 민간자격 수준에서의 청각장애인(농인) 통역사 자격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써 농인의 관용적 수화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안영희, 2004).

3.2. 수화언어의 습득과 사용

3.2.1. 수화언어 습득

수화언어 습득은 농유아/농아동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언어 환경이 모두 같다고 할 수는 없다. 여기서 언어 환경이란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습득 환경을 말한다. 그런데 농인 부모의 농아동들

15) 이 연구는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한국장애인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농아인협회와의 계약에 따라 김칠관에 의해 수행된 이 연구의 결과물은 「한국수화의 언어학적 기초-토착화 과정과 언어구조」(2005)이다. 이 연구는 2005년 12월 23일 한국농아인협회 주관으로 이루어진 「수화언어 차별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바 있다(한국농인협회, 2005 관련 문서 참조).

은 10%에 지나지 않으므로(Padden 등, 1988), 농아동들의 대부분은 자연스러운 언어습득 환경을 보장받지 못한다. 따라서 수화언어 습득은 수화언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크게 구분된다.

수화언어 환경에 있는 농유아들의 수화 습득 과정과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초기 언어발달에서 나타나는 리드미컬한 손 운동이 반복과정을 거치면서 청유아들이라면 자음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운동 패턴이 전용됨으로써 손 모양이나 손을 가져가는 몸의 위치 등에서 몇 가지 틀이 만들어진다(正高, 2001). 그래서 마지막에는 손가락이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수지용알이」(Pettito 등, 1991)가 바로 그것이다. 농유아의 부모가 농인일 경우 수지용알이는 생후 7개월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9개월 이후(10개월) 그 빈도가 압도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Pettito 등, 1991; 鳥越・武居, 2000). 이와 같은 수지용알이와 처음으로 출현하는 낱말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농아동이 첫 낱말을 표출하는 시기는 청아동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아동들이 처음부터 그들의 언어를 이루고 있는 음운 요소를 바르게 조음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농아동 또한 마찬가지다. 농아동들이 쉽게 나타낼 수 있는 수형으로 무표수형이 있어 어려운 낱말을 나타내는 데 대응으로 이용한다고 하는 것(McIntire, 1977)이나 수형 습득에 계층성이 있다고 하는 것(鳥越, 1995)은 그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음운 요소의 발달에서는 수형 뿐만 아니라 위치, 운동 등의 습득에서도 계층성이 확인된다(Holmes & Holmes, 1980; Bonvillian & Siedlecki, 1996/武居, 2005:61-63에서 재인용).

농아동의 언어습득 과정에서는 청아동들에게서 나타나는 과잉 일반화(overgeneralization)도 볼 수 있는데, 동사의 일치에 대한 습득 과정에서의 이에 관한 보고(Fischer, 1973, 武居, 2005:88에서 재인용)가 있다. 또한, 음성 언어와는 다른 특징의 육아어(motherese)가 확인되기도 한다(鳥越, 1995).

서로 다른 시기(나이)에 수화(미국수화)를 습득한 수화자를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Newport, 1990)¹⁶⁾에서는 태어나면서 수화언어에 노출되어 익힌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완벽한 수화를 습득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인지능력에 제한이 있는 쪽이 언어습득에서 보다 유리하다고 하는 것

16) Newport(1990)는 30년 이상 미국수화를 사용한 수화자 30명을 대상으로 제1언어로서 미국수화의 접촉 시기를 ① 나면서부터 접촉한 원어민 집단, ② 농학교 입학(4-6세) 이후 접촉하기 시작한 조기 학습 집단, ③ 12살 이후 농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친구나 배우자로부터 수화를 배운 늦은 학습 집단 등 세 집단으로 나누고, 미국수화의 어순(통사론), 주어와 목적어 및 동사의 일치, 분류사, 상(aspect)과 수에 따른 동사의 굴절 등 형태소를 중심으로 산출과 이해 등 두 측면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어순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그 밖의 항목에서는 ①> ②> ③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Newport는 「제한 유리(Less is more) 가설」을 입증하고 있다.

을 입증하고 있다. 수화언어의 습득에도 감수성기(sensitive period)가 있는 것으로 본다. Newport와 Supalla(Sacks, 1990; 佐野, 1996:156,198에서 재인용)는 5살이 지나 수화를 익힐 경우 그 나름대로의 능력은 갖추더라도 문법적으로 복잡한 부분은 지나치게 된다고 한다. 이는 농교육에서의 언어교육과 깊이 이어지는 문제라고 하겠다. 농아동에게 있어 수화언어는 언어 환경이 보장되기만 하면 확실하게 습득할 수 있는 언어이며, 농아동의 수화언어 습득은 언어습득의 일반적인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한다.

청인 부모의 농아동들은 농학교에 입학하거나 수화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기까지 ‘가정에서만 통할 수 있는 제스처 커뮤니케이션’(home sign)을 사용함으로써 발달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Goldin-Meadow 등(1984, 鳥越, 2008:250-253에서 재인용)은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을 언어학의 틀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녀들의 조사 대상은 청인 부모의 농아동으로 모두가 구화교육을 기반으로 한 취학 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만을 시각적 또는 청각적으로 학습함으로써 학교에서나 가정에서의 수화 사용에는 부정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서로 통하는 제스처 커뮤니케이션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농아동들은 농부모의 농아동과 같이 일반적인 언어습득 과정을 거치면서 수화언어를 습득하는 경우도 있고, 수화언어 환경이 주어지지 않은 대부분의 농아동들은 수화언어와의 접촉이 없거나 불완전한 입력 환경에서도 새로운 언어, 즉 자연언어인 수화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수화언어의 습득도 음성언어와 다를 바 없다면, 뇌에서 수화언어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는 문제가 최근의 관심사이다. 수화언어의 뇌에서의 처리는 기본적으로 음성언어와 다르지 않다(Poisner 등, 1987)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수화언어 사용자도 좌뇌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농인, 농부모의 청인자녀, 청인 등 세 집단을 대상으로 수화문의 이해에 대한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기법에 의한 Sakai 등(2005)의 연구에서는 수화의 이해도 좌뇌 우위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사카이(酒井, 2007:87-88)는 수화가 자연언어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좌뇌 우위(수화 실어증의 예와 함께)를 포함하여 농유아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한다는 것과 문법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든다. 따라서 시간 진행, 구조, 수지/음성 용알이에서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화/음성언어 습득은 단일한 언어능력임을 시사한다(Petitto 등, 1991).

3.2.2. 농인 언어공동체의 특성

농인은 농인부모의 농아동들처럼 농문화 속에서 태어난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여 언어에서 원어민과 같은 능력을 습득한다. 또한 그들의 부모가 속한 문화집단으로부터 신념과 행동을 배운다. 학교에 입학해서는, 뒤늦게 문화의 한 부분이 되거나 농인 부모가 아닌 부모의 많은 농아동들에게 문화와 언어 모델을 제공한다(Padden1989[1980]).

언어와 문화는 농인공동체를 하나의 민족 집단으로 보는 기준이 되기 도 한다. 민족지학(ethnicity)적 접근이 그것이다. Lane(2005)에서는 농인공동체(여기서는 Deaf-World)를 하나의 민족 집단(ethnic group)으로 본다. 농세계, 즉 민족으로서의 농인공동체는 다른 민족 집단이 친족관계를 중심으로 뿌리 내리는 땅이 아니라, 기숙제 학교(농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땅(영역)을 지닌 다. 이 땅은 우리 자신의 땅(a land of our own)으로 부르는 농인의 유토피 아이다. 농인공동체는 세계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고, 서로 다른 두 문화 구 성원들이 만나면 강한 유대감을 느낀다. 그래서 농인공동체는 유대인들과 같 은 디아스포라(Diaspora)¹⁷⁾ 집단이다. 디아스포라 이론이 농문화에 중요한 까닭은 농인들이 지리적으로 공통의 기원을 지니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 도 처에 공동체를 지니는 유일한 언어집단이라고 하는 데서 그 유례를 찾아보 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이다(Ladd, 2003).

민속(folklore)은 농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특히 민속 문학은 민족적 전승으로서, 공동적 전승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印權煥, 1978:142). 그 령다면 문화 전승으로서 농인의 민속은 민족적 토양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Sutton-Spence(<http://www.bris.ac.uk/deaf/downloads/report02>, 2013)에서 영국 농인의 민속¹⁸⁾은, 수화회화체이야기, 말놀이, 영국수화 유머, 영국수화 금기 및 공손체(politeness), 학교 아동들이 사용하는 창조적 언어와 영국수 화의 언어 전승(또는 口碑), 이름 붙이기(사라, 장소 등) 등인 것으로 확인하 고 있다. 농인 민속은 ‘데프후드(Deafhood)’¹⁹⁾(Ladd, 2003)와 같은 관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Sutton-Spence 위 자료). 여기서 데프후드란 시각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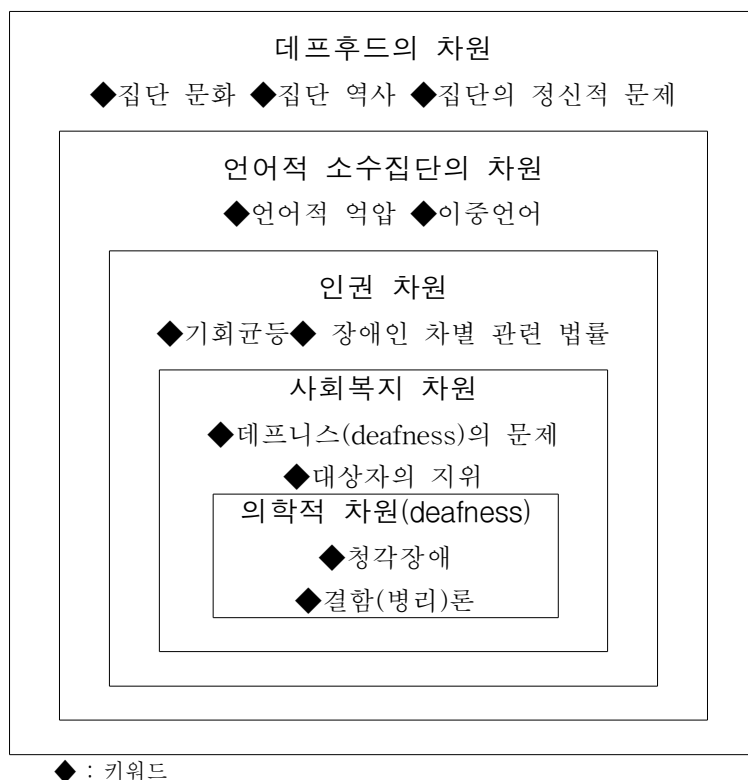
17) 디아스포라란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난 이후 비릇된 민족의 이산(離散)을 의 미하는 말이다. 문화를 중심으로 할 경우, 문화란 발상의 중심지에서 다른 지역(나라)으로 이동하 면 변화된 모습으로 발견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디아스포라적 특징을 포함한다고 한다(Clifford, 1997; Ladd, 2003; 森 幹, 2007:343에서 재인용).

18) 이 용어는 다양한 측면에서 조어됨으로써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Deaf folklore, Deaflore, Signlore 등이 그것이다.

19) 이 용어는 Ladd에 의해 조어진 것으로, 집합적 존재로서 농인의 참 성질을 드러내고자 한 것인데, Ladd에서 Deafhood란, 한정된 상태로서가 아니라 농인 개인이 농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process)이다. 최근 이 용어는 농인공동체에 폭넓게 받아들여짐으로써 확산되고 있다.

집합적(visual collective) 공동체 성원으로서 농인의 농정체성 발견과 발전을 통한 과정(그림 1.4)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인 농인 민속은, 특정 사회(또는 민족) 성원들이 습득하고, 공유하며, 전달하는 행동 양식으로서의 문화(농문화)의 개념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Stokoe, Klima와 Bellugi 이후 수화언어에 대한 언어학적, 사회언어학적 연구가 이루어졌고, 여기에 약간의 인류학적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 이들 연구 과제의 초점은, 공동체의 정체성, 문화 현상, 특별한 언어 그리고 이들 과제 분석을 위한 이론과 방법론이었다(Senghas 등, 2002). 카메이(龜井, 2006:20)는 이와 같은 농문화 연구를 문화인류학적 접근으로 본다. 이들 연구는 농인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구체적인 생활·행동양식을 다루고 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집합체를 이루고 여기서 수화언어를 공유하게 되면, 이 언어공동체 특유의 가치관, 관습, 이야기, 지식, 역사관, 분류체계, 세계관, 귀속의식 등이 생겨난다. 이들 문화 요소가 서로 이어져 문화 복합체를 이루며, 이와 같은 생활·행동양식을 바탕으로 한 예술·학술활동을 수화언어로 하게 된다. 이러한 여러 현상을 「농인의 문화」 또는 「농문화」라 한다.



<그림 1.4> 의학적 차원에서 데프후드로의 차원적 단계(Ladd, 2003)

농인, 농인공동체(언어공동체 또는 수화언어공동체), 수화언어, 문화(농문

화) 등은 언어로서 수화의 구조가 밝혀진 이후 여러 학문적 접근, 즉 언어학, 심리언어학, 사회언어학, 인류학(의료인류학, 문화인류학, 교육인류학 등) 등의 접근 방법을 바탕으로 분석된 바 있다. 앞에서의 논의는 이와 같은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4.1. 농인

농인이란 농인부모로부터 태어나 농문화 속에서 자라며 수화언어를 습득하고, 부모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신념과 행동을 익힌 사람, 청인부모로부터 태어나 학교에서 처음으로 농부모의 농아동들을 통해 수화언어를 습득하여 자연스럽게 농문화를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농인공동체의 성원이 된 사람, 성인이 된 뒤에 수화언어를 습득하고 농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사람을 이른다. 어떠한 경우에도 농인은 자타가 인정하는 언어와 문화를 가진다.

4.2. 농인공동체

공통언어, 공통체험과 가치관을 가지며, 농인 또는 청인과의 상호 교류에서 공통의 방법을 가진 농인 또는 난청인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을 이른다. 집합주의(collectivism)를 바탕으로 함으로써, 농인과 청인의 다름을 강조하며, 집단의 요구를 강조하고, 사회적 규준과 의무는 집단에 의해 규정하며, 집단 구성원과 더불어 신념을 공유하고, 구성원 속에서의 협동을 마련한다. 독자 언어와 문화를 가진다는 데서 하나의 민족 집단으로 보기도 하며, 특정 집단(미국)의 경우 태도(attitudinal deafness)에 따라서는 청인도 집단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수화언어와 농문화를 가진다는 데서 농인수화언어공동체, 수화언어공동체, 언어(발화)공동체, 언어·문화공동체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4.3. 수화언어

농인공동체 속에서 자생하여 발달한 자연언어로서 언어의 보편적 특성에서 본 구조를 가지며, 독자의 문법체계를 바탕으로 운용하는 시각·동작 체

계의 언어이다. 음성언어 습득 과정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언어습득에서의 보편성을 가진다.

4.4. 농문화

독자의 언어, 가치관, 행동규칙, 전통 등을 가지는 농인공동체 구성원들이 습득한 일련의 행동이다. 여기서 행동이란 농인이 하는 행동을 하며, 농인의 언어를 사용하고, 자신들과 농인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견해를 공유한다. 농문학(수화문학), 농민속(수화민속), 농미술 등은 농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4.5. 유사수화체계

인공체계 또는 조작된 체계라 하는데, 독자의 문법체계를 가지지 않는다. 이 체계는 수화 단어를 음성언어의 형식에 대응시키는 방법을 근간으로 하므로, 수화언어의 보편적이며 대표적인 특징인 동사의 일치와 분류사 구문 구성 등을 볼 수 없다. 이 범주에 속하는 체계로는, 예컨대 한글식 수화를 비롯하여 자국의 음성언어 체계를 바탕으로 한 모든 체계가 여기에 속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농인공동체와 농문화

1.1. 개관

농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은 많은 연구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문화와 관련된 전통적(인류학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많은 현상이 농인공동체 속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특징적 현상들과 역사적 배경이 이를 뒷받침한다. 농문화 연구에서 농인 자신들의 역사적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그 까닭은 농인공동체와 농문화에 대한 밖으로부터의 관찰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농인공동체와 농문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시작된 것은 1980년대를 전후해서였다. Padden과 Marcowicz(1976), Baker와 Padden(1978), Padden(1980) 등이 그 기반을 다졌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수화언어학, 사회언어학 등의 연구 성과와 일반적 학문의 틀을 이용하여 농인공동체와 농문화를 조명하는 것이었다. 농문화 연구는 연구자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서로 다른 체험과 학문적 배경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논의에서는 농문화 안에서의 성찰과 밖으로부터의 관찰을 큰 줄기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1.1. 농문화에 대한 성찰

농문화 속에서의 성찰은 농인의 체험과 시각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따라서, Padden과 Humphries(1988, 森 등 역, 2003), Ladd(2003, 森 감역, 2007), Padden과 Humphries(2005)에서의 농문화 기술은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농문화 정착의 필요성」(강주해, 1998), 「농문화 선언」(木村·市田, 1995a) 등 소론(essay) 또한 농인공동체 안으로부터의 지나칠 수 없는 농문화에 대한 성찰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농문화 기술에서의 핵심적 화두는 모두 농인, 농인공동체, 수화언어 등이다.

「농문화 선언」은 농인공동체(일본)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농문화에 대한 농인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농인이란, 일본수화라고 하는 일본어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소수인이다.」-이것이 우리의 「농인」의 정의이다.

이것은, 「농인」=「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즉 「장애인」이라고 하는 병리적 관점에서, 「농인」=「일본수화를 일상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 즉 「언어적 소수인」이라고 하는 사회적·문화적 관점에서의 전환이다. 이와 같은 관점의 전환은 농인이 사용하는 수화가 음성언어에 비해 손색없는 ‘완전한 언어’라고 하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이다(木村·市田, 2000[1995]:8).

이 선언의 근간도 청각장애인에서 농인으로서의 분리를 의미한다. 인종, 세대, 공동체 내 소수집단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농인공동체 안에서의 이와 같은 성찰은 정체성과 깊이 이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1.1.2. 농문화의 새로운 접근

농문화도 지역(또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중시하는 연구(龜井, 2000; Monaghan 등, 2003; Padden 등, 2005)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서즈비니아드 섬사람들은 수화로 말한다」²⁰⁾의 발표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농인소수공동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태평양 지역, 남북미 대서양 연안과 카리브해 연안, 유럽 등 거의 모든 지역을 망라할 만큼 많은 조사연구가 이루어졌다. 때로는 이상적인 공동체 모델로, 때로는 소멸위기의 언어공동체로 부각되면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힘 있는 지역 수화가 힘없는 지역 수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함으로써 때와 관점에 따라 농인공동체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농인공동체에 대한 통념에 새로운 관점을 제기함으로써 농인공동체와 그 문화에 접근하고자 하는 학자들 가운데서도 카메이(龜井, 2006)의 경우는 매우 특이하다. 그는 농인공동체를 장애인 모델, 농문화 모델, 다언어 다문화 모델 등에서처럼 정적인 측면을 강조해 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동적인 공동

20) 이 책은 Groce, Nora Ellen의 박사학위 논문(‘마서즈비니아드 섬의 유전성 농-유전 장애의 민족사’)을 토대로 한 것으로, ‘*Everyone here spoke sign language: Hereditary deafness on Martha's Vineyard*’로 출간된 것이다. 본문의 제목은 박승희 교수의 번역본(한길사)의 것이다.

체 모델을 제기한다. 농인공동체는 유동적이며, 농인의 이동이나 수화언어의 전파에 의해 새로운 언어와 문화가 생성된다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농인공동체의 동적인 측면을 대상으로 하는 관점의 전환은 아프리카에서의 그의 관찰과 참여(field work)를 통해 이룬 것이다. 농인공동체와 그 문화에 대한 동적인 관점은 농인과 청인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하나의 작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2. 농문화의 위상

민족은 고유 언어를 잃어도 계속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문화를 잃으면 더는 민족이라 할 수 없다(Ladd, 2003). 문화란 생각을 공유하고 감정을 공유하며, 신념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문화는 농인들이 자기 자신을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는지를 반영하는 것이다(Padden 등, 2005). 농문화는 역사를 말한다는 것, 무한한 상상력을 준다는 것, 정의를 추구하도록 한다는 데서 소중하다(大杉·Padden, 2003; 김철관 역, 2005:17-20).

19세기 중반²¹⁾ 이후 농인공동체는 자신들의 존재가 인지되기를 목표로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불완전하게나마 그것이 실현된 것은 핀란드가 소수언어 공동체의 지위를 법적으로 승인²²⁾(1995)하게 된 뒤의 일이다(Ladd, 2003). 뒤의 일이언어로서 수화의 인지와 수화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수단의 정비에서 「플렌스부르크 권고」(2000)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농인, 농인공동체, 수화언어, 농문화는 이제 지식체계의 틀 속에서가 아니라 농인공동체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농인들의 말로 기술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지역(국가)에서 농인들의 언어와 문화가 법을 바탕으로 한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문화를 단편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포함한 적지 않은 지역에서의 실정이다. 그것은 농문화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에서 특

21) Ferdinand Berthie는 1838년 한 농인클럽을 중심으로 처음으로 빠리에 농인의 사회적 조직을 창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농인들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한 농인공동체의 지원을 실현하기도 하고,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기도 했다(Zuhair Alsaegh, 1997). 그는 「농인의 나라(nation sourde)」(Lang. H. 등, 1995:37-38) 구상으로도 유명하다. 농인의 나라 개념은, 농인은 까닭이 있어 세상에 존재하며, 창세의 불가결한 일부로서 신(神), 혹은 알라, 또는 어머니 대지에 의해 의도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정신적 이념과 내용적으로 이어져 있었다(Ladd, 2003/森 감역, 2007: 691). 그 뒤에도 청인 중심의 사회로부터 억압 받지 않는, 수화가 자유로운 사회를 독립으로 실현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미국과 영국 등에 있었다(龜井, 2009: 169).

22) ‘수화 사용자 및 장애로 인하여 통역 또는 번역 지원이 필요한 자의 권리는 법률로 이를 보장한다’(제17절 ‘언어와 문화에 대한 권리’에 포함) www.finlex.fi/fi/laki/kaannokset/1999/en19990731.

히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는데, 하위문화(subculture)²³⁾ 이론과의 관계에서 그러하다.

농문화의 이와 같은 독자성은 갈로렛대학 학생운동²⁴⁾과 「농문화의 선언」에서도 뒷받침하고 있다. 갈로렛대학 학생운동은 공민권 운동의 일환으로서 문화권(cultural rights)²⁵⁾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고, 「농문화 선언」은 완전한 언어인 수화가 중심이 됨으로써 농문화의 독자성을 입증한다.

2. 농 정체성과 언어권 보장

2.1. 농인과 정체성

2.1.1. 농문화와 정체성

문화와 정체성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문화의 중심에는 언어가 있기 때문이다. Kramsch(1998; 김칠관·윤병천, 2011a:68에서 재인용)는 언어와 문화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느 지역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말과 지역 주민의 집단 정체성(group

23) 용어의 기원은 1950년에 사회학자 David Rissman이 사용한 것이 최초이다. 의미는 「주류 문화에 반하는 개인의 모임」이었다. '서브'(sub)란 사회적 주류 문화와 가치관으로부터 이탈한, 인종적으로 소외된 그룹이나 거리의 아이들(street children), 동성애자 등의 하위집단이란 의미로, 미디어 문화 이외의 가치관과 행동양식, 언어 등, 원래의 「문화(culture)」에 대응하는 의미에서 「subculture」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그러나 농사회와 관련해서 이 용어는 주류문화(다수집단인 청인문화)에 비해 하급의 문화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용되기도 했다. Peng(1978/神田역, 1981:24-25)은 이중언어 상태에 있는 일본농인에게 있어 상급언어는 일본어이고, 일본수화(JSL)는 하급언어라고 한다. 이에 일본 농인들에 의한 하위문화(sub culture)가 형성됨으로써, 농인들은 이중언어, 이중문화를 지닌다고 한다.

24) 1988년 농인 학장을 요구(Deaf President Now)한 데서 비롯된 운동으로, 결국 농인이 학장으로 선임되면서 막을 내렸으나, 이 운동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시위 이틀째인 3월 11일, 뉴욕 로체스터 농과대학생 300명이 15시간 걸려 워싱턴에 도착하였고, 미국 전역의 농학교가 이 운동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휴교 상태에 들어갔다. 세계 도처에서 농인들이 몰려옴으로써 캐나다수화, 남미수화, 유럽수화, 뉴질랜드수화를 볼 수 있었다. 이 운동은 48시간 만에 미국의 모든 대중매체를 석권했다. 1,000명의 갈로렛대학 학생을 포함한 2,500명 정도의 시위대가 연방의회 의사당을 향하고 있었다(Sacks, 1990; 佐野 역, 1996: 251-252에서 재인용).

25) 김수갑(2006:162)은 문화권이란, 언어, 관념, 믿음과 같은 민족적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이 관련된 분야를 포함한다. 나카무라(中村, 1999:45-53)는 갈로렛대학 학생운동을 비롯한 미국 농인운동은 신사회운동으로서,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체성과 농문화라고 하는 이념 속에서 농(Deaf)인들은 자신들을 소수민족으로 인식한다고 하는 데 주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갈로렛대학 학생운동은 민권운동의 구조 확장(frame extension)으로 볼 수 있는데, 언어와 문화에서 청인과는 다르다는 것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identity)은 서로 관계가 있다. 그들은 억양이나 어휘, 담화형식으로 서로를 인식하며, 그것을 공유하는 사회 일원으로 인정한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과 같은 말을 씌으로써 살아가는 힘을 과시하며 사회적 존재감, 역사적 연속성도 이끌어낸다.

Schein(1989; Sacks, 1990, 佐野 역, 1996:268에서 재인용)은 다음과 같은 한 농인 청년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어느 날 누나와 함께 농학교에 갔다. 드디어 「이방인들 속에서 내 집에(at home among strangers)」 도착한 것이다. 거기서 진짜 애정을 경험한 것이다. 처음으로 나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나라의 이방인이 아니라는 느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맛보았다.

농학교에서의 생활은 농인에게 있어 단순한 추억이 아니다. 농학교는 그들의 가정 같은(가정보다도 더 가정 같은) 곳으로서 농문화의 싹이 트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정체성(identity)이란 변함이 없는 자신을 자각하는 것(연속성), 다른 사람과는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존재(개별성)를 생각하는 것, 자기 개념(자신은 누구인가)과 자기상(자신의 이미지) 등의 핵심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아이들 속에서 성숙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와의 관계와 체험을 통해 서서히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 안의 정체성(자아동일성)과 집단 정체성(집단 소속의식, 소속감)은 밀접하게 관련된다. 농인의 정체성 형성은 농인 공동체와의 관계, 수화를 포함하는 농문화와의 접촉이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鳥越, 2000).

유네스코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2001)²⁶⁾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 문화는 예술 및 문학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공존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 그리고 신념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정체성은 문화권, 문화다양성등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이본 돈더스, 2006). 문화정체성은 또한 농문화 정체성의 기반을 이루는 것들이기도 하다.

2.1.2. 농정체성 발달

26) www.unescoapceiu.org/bbs/files/pdf/2004/040228_EIU_livingtogether_p153-155.pdf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농인은 처음부터 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농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농인이 되는 것이다. 문화적 관점에서 정체성 형성은 농부모의 농아동과 청인부모의 농아동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Padden 등, 1988). 앞의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농인공동체와의 접촉이 이루어지며, 그 속에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의 언어인 수화를 습득하게 된다. 또한 농인으로서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익히게 되는 것이다. 농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긍정적 자기상은 주변의 어른 농인을 모델(role model)로 함으로써 쉽게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적·교육적 환경을 통해 청각장애는 극복되어야 한다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화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이 치료²⁷⁾와 특별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게다가 이와 같은 장애인관, 가치관이 다수집단 사회의 핵심을 이루는 생각이라는 것을 확인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이문화로서 청인의 문화와의 접촉, 갈등, 통합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청인부모의 농아동들에게 있어서는 농학교를 중심으로 비로소 농인의 세계에 들어서게 되며, 수화를 배우고, 농인 교사를 모델로 하면서 긍정적인 자기상을 형성해 나간다. 농학교 경험이 없는 농아동들이라도 성인이 된 뒤 농인과의 접촉을 통해 안정적인 자기상을 구축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농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이 아무런 굴곡 없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에서는 수화 학습이 농청년의 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민은주, 2009)되었다. 민은주는 수화를 제2언어로 학습한 농청년들이 수화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청각장애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되었으며, 그것을 농문화에의 귀속감 속에서 발견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박정란(2009)은 수화 사용이 농인의 정체성 회복뿐만 아니라 농문화와 청문화 통합의 통로이며 열쇠라고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화언어 및 농문화가 농정체성 형성에서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며 기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농인들을 위한 교육·문화·사회 전반에서의 지원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27) 의학계는 농인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 본다. 이것은 늘 농인공동체가 걱정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Padden 등, 2005:162). 이와 같은 생각은 교육(농학교 교육)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농인의 제1언어로서 수화(미국수화)를 지나친 채 언어병리학자로서의 교사를 파견함으로써 농학생들의 발성 능력 회복에만 힘을 기울인 정부 정책에 대한 Lane(1984, 石村 역, 2000:3-4)의 비판이 그것을 웅변한다.

2.2. 언어권 보장

2.2.1 언어권의 개념

주요 국제법²⁸⁾에서의 언어권 규정을 요약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주요 국제법 등에서의 언어권 관련 규정

국제 규약·협약		언어권 관련 내용
○국제인권규약(A)	1966	언어 등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음
○국제인권규약(B) (27조에 대한 유권해석)	1966 (1994)	언어 등의 권리 존중 및 확보 (소수언어민 등에 관한 기준 객관적으로)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체제(frame work) 규약	1995	소수언어민의 권리 -개인적 권리
○아동의 권리 협약	1989	자기 언어를 사용할 권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006	국제인권규약 기반, 언어로서 수화와 수화 언어를 기반으로 한 기본적인 권리

세계인권선언(1948) 이후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많은 규약, 협약, 규칙 등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들 법적인 틀 속에서의 언어권은 인권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세계언어권선언」²⁹⁾에서는 개인 및 집단의 언어권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2.2> 개인적·집단적 권리(세계언어권선언)

개인적 권리(제3조 1항)	집단적 권리(제3조 2항)
○ 한 언어공동체의 성원으로 인정될 권리	○ 자신의 언어·문화의 교육에 대한 권리
○ 자신의 언어를 사적 또는 공적으로 사용할 권리	○ 문화적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 자신의 이름을 붙일 권리	○ 통신 미디어에서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공평한 비율로 대표할 권리
○ 같은 언어공동체의 다른 성원과	

28) 全國ろう児をもつ親の會編(2004:110-119) 참조.

29) 일본어역(言語權研究會編, 2004[1999]:167-168) 참조.

교류 및 단결할 권리 ○ 자신의 문화를 유지, 발전시킬 권리	○ 정부·행정기관과의 관계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자신의 언어로 대우받을 권리
--------------------------------------	--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언어권은 Skutnabb-Kangas와 Phillipson(1995, 木村 역, 1999:103-104)에서의 「언어의 인권(Linguistic Human Rights)」³⁰⁾과 유사한 부분³¹⁾이 많다. 언어의 인권 또한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에서의 권리를 제시한다. 개인 수준에서 언어의 인권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모어(mother tongue)³²⁾가 다수집단 언어든지 소수집단언어든지에 관계없이 모어와 긍정적으로 동일시 할 수 있고, 그것이 타인으로부터도 존중받는다는 것을 함의한다. 집단 수준에서 언어의 인권을 지킨다는 것은 소수언어가 존속할 수 있는 권리, 즉 「차이」에의 권리를 함의한다.

언어권은 기본적인 인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언어 사용자들은 자기 언어에 대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사적이거나 공적인 장에서 자유롭게 자기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이들의 언어 선택권이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언어권은 개인적인 권리이면서 또한 집단적 권리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권리의 보장이야말로 한 인간의 인격 형성에 절대적인 바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2.2. 수화언어의 지위와 농인의 언어권

2.2.2.1. 농교육과 언어권

농아동과 다른 소수공동체 언어 사용자와의 다른 점은, 대부분의 농아동은 가정에서 모어를 습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농인부모에게서 태어난 농아동은 부모로부터 수화를 습득할 수 있지만, 농아동의 약 90%³³⁾는 청인부모

30) 일본의 경우, 「Linguistic Human Rights」를 「언어적 인권」(木村, 1999)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언어권」(小嶋, 2012)으로 쓰기도 한다. 여기서 앞의 경우는 「~적(的)」이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뒤의 경우는 용어 원래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Skutnabb-Kangas(2004, 古石, 2004:70에서 재인용)는 이 용어가 「인권」과 「언어권」을 합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언어의 인권」으로 한다.

31) Skutnabb-Kangas 등은 「세계언어권선언」 작성 초기 농인공동체와 수화사용자들의 권리를 반영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였다고 한다(Skutnabb-Kangas 등, 1995, 木村 역, 1999:123).

32) Skutnabb-Kangas(1984:18)에서 모어란, ① 처음 배운 언어, ② a. 자신이 동일시 하는 언어 b. 타인이 원어민으로 동일시하는 언어, ③ 가장 잘 아는 언어, ④ 가장 잘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해당되는 것이다(www.tove-skutnabb-kangas.org/).

에게서 태어나므로 수화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樵, 2012:181). 이러한 상황은 학교에서의 제1언어 습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농아동의 교육상 어려움이 듣지 못한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1언어에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데서 오는 것(Cummins, 2011)이라 함은 제1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이중언어교육을 전제로 볼 때, 습득된 언어 기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어떤 언어도 온전히 구사할 수 없는 상태³⁴⁾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중언어교육을 전제로 할 때, 한국과 일본에서의 대상 농아동들은 다음과 같은 구분(湯川, 2000/김칠관, 2005a)이 가능하다.

<표 2.3> 언어습득과 언어교육 환경의 종류(湯川, 2000 참조)

언어습득 환경(가정)	언어교육 환경(학교)
(1) 수화가 가능한 부모, 수화가 L1	a. 청각·구화법 b. 수화·구어 이중언어교육
(2) 수화가 불가능한 부모, 구어가 L1	a. 청각·구화법 b. 수화·구어의 이중언어교육
(3) 수화가 불가능한 부모, L1 미습득	a. 청각·구화법 b. 수화·구어의 이중언어교육

*L1: 제1언어

농아동들의 언어습득과 언어교육 환경을 <표 2.3>과 같이 단순 구분할 때 대부분의 한국 농아동들의 경우는 (3)과 같은 환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학교에서의 언어교육 환경이 b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김칠관, 2005a). 이와 같은 농아동의 언어습득 및 언어교육 환경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자.

언어습득 환경은 농인부모와 청인부모의 농아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청인부모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구어 습득 환경이 조성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여기서는 (3)의 경우뿐만 아니라, 언어습득 환경의 어느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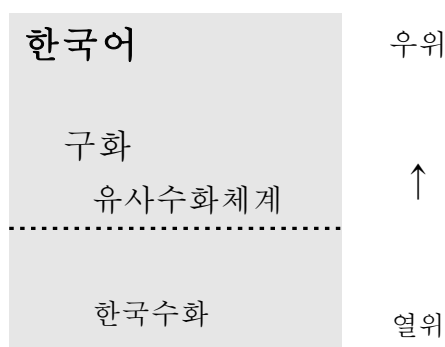
33) 입문기 농학생의 10% 미만은 농인부모에게서 태어난 농인이다(Padden 등, 1988, 삼 등 역, 2003:22). 농부모에게서 태어난 농아동의 비율은 95%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으로 본다(Holcomb, 2012:39에서 재인용).

34) 이와 같은 상태를 ‘semilingual’이라 하는데, 1960년대 스웨덴에 살고 있는 핀란드 아동들의 언어 능력 연구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이다. 대상 아동들은 스웨덴어와 핀란드어만을 사용하는 아동(monolingual)에 비해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떨어지는 언어능력은, ① 어휘와 표현 내용의 풍부성, ② 언어의 정확성, ③ 인식과 정서적 측면을 표현하는 능력, ④ 언어의 의미와 자신의 심적 체험을 잇는 능력 등이었다(湯川, 2000:36).

도 학교에서의 원활한 교과 활동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1), (2)의 경우는 아동이 습득한 언어(수화)의 확장을 위한 환경 조성이 어렵다는 것 때문이다. 학교에서의 언어교육 환경은 그 나름대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중에서도 수화언어와 음성언어 모두 습득이 불충분한 아동의 경우가 특히 문제이다.

농학교 교육에서의 국어 중심주의는 국가주의적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Cummins(2011)에서의 논의와 같이 객관적인 연구 결과가 아니라 이념이 농아동 교육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밀라노 회의³⁵⁾ 이래 백여 년을 이어 온 이념적 유산으로서, 여기에 농인들의 언어권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다. 이로써 농아동들은 학습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수화언어에 대한 말살적인 구화주의(Skutnabb-Kangas, 2003)는 식민주의(Lane, 1993; Ladd, 2003)를 방불케 한다.

농인은 유아기 교육에서부터 이와 같은 수화 말살적 교육 환경에 놓이게 됨으로써 언어의 인권을 누릴 수 없음은 물론 이것은 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화언어에 대한 교육에서의 이와 같은 말살적 평가는 결국 사회 전반에서 수화에 대한 낮은 평가와 의식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성인이 된 뒤의 농인들의 인권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한국에서의 사용 언어 서열 이미지는 <그림 2.4>과 같다.



<그림 2.4> 한국 농교육에서 사용 언어의 서열 이미지

수화언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은 어느 지역(국가)에서나 독자의 언어와 문화를

35) 1880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국제 농교육자 대회’는 농교육에서 구화법을 유일한 방법으로 채택함으로써 수화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게 되었다. 이 회의는 돈과 명성을 앞세운 알렉산더 그레함 벨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았는데, 가결에서 농인교사들을 제외시키기도 했다. 이 여파로 농인교사의 수는 가파른 감소 추세를 보이게 되었다(Sacks, 1990, 佐野 역, 1996: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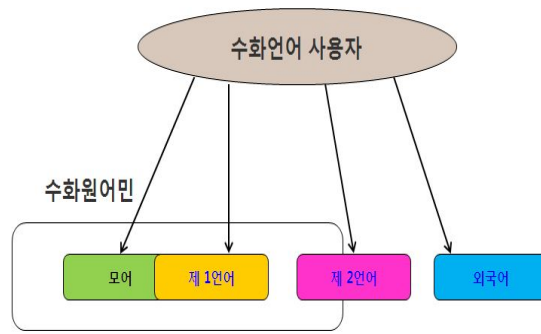
지니는 소수 언어공동체이다. 한국의 경우 수화 사용 농인의 수는 5만여 명으로 추산(김철관 윤병천, 2011b)하기도 하고, 권재일 등(2009)의 조사·연구에 기초한 추산으로는 그 수가 9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농인의 수화 사용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음성언어의 습득과 다르다. 그것은 절대다수의 농인들이 청인 부모로부터 태어난다는 것 때문이다. 따라서 나면서부터 수화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농아동들은 농학교(주로 기숙사)를 중심으로 수화를 습득하기도 한다. 이와는 달도 음성언어 환경에서 자라고 교육받은 농인들이 뒤늦게 수화를 배우는 경우 등이 있다. 수화 사용 농인들은 대개 이와 같은 환경을 거치면서 수화를 사용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그림 2.5>와 같이 나타낼 수 있2.5>여기서 수화 사용 농인의 중심은 주로 수화 원어민에 속하는 집단이다.

음성언어가 지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변이(variation)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화언어 또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변이가 존재한다. Lewis 등(1997)에서는 수화언어에서 지역적 변이(regional variation)를 미국수화의 풍부한 언어요소 중의 하나로 꼽는다. 한국의 경우, 음성언어에서와 같은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 않지만 지역적 변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서준환, 2003; 서도원, 2007)된 바 있다. 농인의 수화 사용에서는 지역적 변이뿐만 아니라 나이, 성, 민족·인종 등 다양한 속성과 관련한 변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김철관 윤병천, 2011a:27-29에서 재인용). 이것은 수화언어가 언어로서의 보편적 구조뿐만 아니라,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음성언어와 다를 바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세계언어권선언」³⁶⁾에서는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선언한다. 교육은 늘 언어적 및 문화적 다양성과 함께 전 세계 서로 다른 언어공동체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꾀하는 것이어야 한다(제23조 제3항). 모든 언어공동체는 유치원, 초중등학교,대학, 성인교육 등 자신의 지역 교육 전반에서 얼마만큼 자신들의 언어를 교수언어로 사용하며, 또 학습 교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제24조).

36) 言語權研究會編(2004), ことばへの權利, 東京: 三元社, 161-184 참조.



<그림 2.5> 수화원어민과 수화언어 사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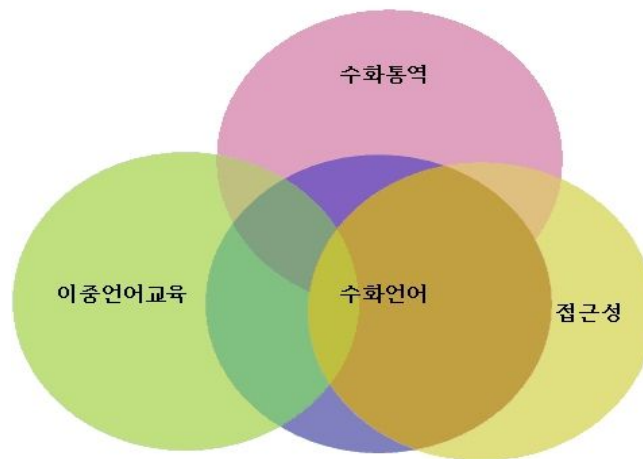
2.2.2.2. 수화언어 사용과 언어권

수화언어의 사용과 언어권의 문제는 수화언어의 사회적 지위와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수화언어의 지위와 관련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문제는 음성언어에 못지않은 완전한 언어를 지니면서도 사회 전반에서 자신들의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소수언어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바로 농인공동체이다. 대부분이 청인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이들은 언어습득의 기회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교(농학교, 일반학교를 가릴 것 없이)에 입학해서도 자신들의 확실한 언어(수화, 음성언어를 가릴 것 없이)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 즉 언어권을 잃게 됨으로써 사회 전반에서의 모든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의 전향적 계기는 불평등을 조장·확대·재생산하는 무지와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일 것이다.

2.2.3. 언어권 보장

Hilde Haualand 등(2009:9)에서 농인의 인권을 위한 기본 요소로, ① 농인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 수화언어의 사용과 인정, ② 수화언어와 국어의 이중언어 교육, ③ 동등한 시민권과 차별 방지 법률을 포함한 사회와 생활 전반에서의 접근성, ④ 수화통역 등을 들고 있다. 이들 4가지 요소의 이행은 농인의 인권 보호에 상당한다.



<그림 2.6> 농인의 인권을 위한 기본 요소(Hilde Hauland 등, 2009)

농인에게 있어 인권의 완전한 향유는 이 모델의 핵심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수화언어이다. 따라서 농인의 언어권 보장에서 근간이 되는 요소는 <그림 2.6>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수화언어] 농인의 언어권은 수화언어에서 비롯되며, 수화언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화언어의 공인이다. 수화언어의 공인 없는 언어·교육정책, 관련 법률 등에서 농인의 언어권은 종이 위의 지위(paper status)³⁷⁾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화의 문제를 처음으로 유럽 수준에서 접근한 것은 유럽의회였다. 「수화에 대한 유럽의회 결의」(1988)가 그것인데, 이 결의는 「농인의 수화에 대한 결의」를 부제로 하여 7가지³⁸⁾ 사항을 결의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농인이 사용하는 수화의 공인(official recognition)이다. 그래서 수화 사용에서의 장애를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수화의 공인이 농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며 대전제이기 때문이다.

[이중언어 교육] 농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농인의 언어권 보장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서 언어의 문제가 안정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인의 정체성 형성의 문제 또한 교육을 시발점으

37) Hilde Hauland 등(2009:22)은 실질적인 농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평등한 시민권이란 'paper status'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한다.

38) 이 결의는 수화의 공인을 비롯하여 수화통역, 수화와 TV, 청인에 대한 수화교육, 수화사전, 수화의 교류,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www.policy.hu/flora/ressign2.htm).

로 하기 때문이다. 음성언어만을 목표로 하는 농학교 교육의 결과는 동화를 기반으로 하는 식민지화이다. 농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교육 시기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는 까닭이다.

이중언어교육은 스웨덴 모델을 호시(1983)로 하는데, 이 모델에서는 수화(스웨덴수화)를 제1언어로 하고, 제2언어인 음성언어(스웨덴어)의 읽고 쓰기 능력을 중시한다(鳥越 등, 2003). 이 모델은 제2언어 도입 시기와 소재(지식형, 체험형 등) 등(古石, 2012)의 문제가 있으나, 농교육을 발전적으로 검토함에 있어 최선의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연구의 불모지에 가까운 한국의 경우, 정운기(2005)에서 조기의 제1언어 습득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이중언어 교육의 본질에 가까운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농아동들로 하여금 한국어를 제1언어로 습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하다. 농학교 교육에서 음성언어(자국의 국어)를 제1언어로 습득하도록 하는 데 성공한 곳은 없다. 물론 개별적인 예외는 어디서나 있을 수 있다. 음성언어의 형식을 바탕으로 한 유사수화체계가 음성언어의 읽고 쓰기(Literacy)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더러 있으나, 관련 보고는 부정적이다. 예컨대 Chamberlain 과 Mayberry(2008, Commins, 2011 강연 자료에서 재인용)에서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수화를 주 언어로 하는 선천성 농인 40명에 대한 읽고 쓰기(중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능력 검사에서 능력이 높은 집단은 수화의 문법적 능력과 문장 이해력도 높았다. Mayberry(1993, 武居, 2003:52-54에서 재인용)에서는 미국수화를 사용하는 농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적 방법을 통해 제1언어의 습득 시기가 제2언어의 최종적인 소산에 영향을 준다는 「제1언어 타이밍 가설(L1 timing hypothesis)」을 검증한 바 있다.

[접근성과 수화통역]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는 접근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인에게 있어 접근성의 문제는 수화통번역과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한다. 뉴질랜드 수화언어법이 특히 통번역을 동시에 강조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제16회 WFD(세계농인연맹) 대회(2011) 결의에서는 전문적 수화통역 제공을 포함하는 정보·통신으로의 접근 등을 통해 생활의 모든 장면에 완전히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

농인의 언어권 보장은 언어로서 수화의 공인을 기반으로 하고, 언어권의 핵심을 이루는 수화를 바탕으로 교육, 접근성, 수화통번역 등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룸으로써 가능하다.

3. 수화언어의 법적 지위 고찰

3.1. 인권과 언어권

언어권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오늘날 인권문제는 국내외의 문제로서 국제인권법상 검토되고 보장되는 권리이다. 여기서 국제인권법이란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를 바탕으로 한 인권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장함과 아울러 인권의 이행 확보를 위한 조치에 관한 일련의 법률체계이다.

한편 언어권이란 인간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을 언어적 측면에 적용함으로써 이른바 언어차별을 시정하려고 하는 시도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언어권이란 차별을 부정하는 개념을 중요한 요소로 한다. 차별이란 일반적으로 다수언어집단의 소수 언어집단에 대한 차별로 드러난다. 다만, 언어권이란 그와 같은 차별에 대한 부정에만 머물지 않는 고유의 보장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어 있지 않아 논자에 따라 다르다. 이 점에 대해 ‘세계언어권선언’(1996년 6월 세계언어권회의 채택)에서는 “자신들의 언어를 사적 또는 공적으로 사용할 권리”에 덧붙여 “언어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인지될 권리”나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자신들의 언어를 교수언어로 사용할 권리”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언어권이란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언어집단이 사용하기를 바라는 언어를 사용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누구에게서도 방해받지 않을 권리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언어권’을 주장하는 데는 언어적 소수집단이나 소수민족의 제1언어 내지 모어 사용에 관한 권리로서의 주장과 일반적인 언어사용 선택권으로서의 주장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측면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앞엿것은 좁은 의미의 언어권, 뒤엿것은 넓은 의미의 언어권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권은 아동이 제1언어 내지 모어(母語)로 교육받을 권리 및 언어 선택권의 기초를 다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언어권으로부터 여러 가지 주장을 도출할 수 있겠는데, 교육에 관한 언어권의 주장은 그중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제1언어 내지 모어로 교육받을 권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3.2. 국제인권으로서의 언어권

언어권은 국제적으로 이미 몇 가지 국제문서로 명기되어 권리로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즉, 언어권에 대해서는 국제적 보장이 국내법적 보장보다도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언어권 보장을 논함에 있어 먼저 국제인권으로서의 언어권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3.2.1. 국제법 및 국제적 선언

(1) 세계인권선언 (1948. 12. 10. 국제연합 제5차 총회 채택)

제2조 ①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 가문 혹은 기타 지위 여하로 인하는 하등의 차별을 받음이 없이 본 선언에서 발표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 1966.12.16. 국제연합 제21차 총회 채택)

제2조 ② 본 규약의 당사국은 본 규약에서 규정하는 권리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 출생 또는 기타 지위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1966.12.16. 국제연합 제21차 총회 채택)

제2조(국가의 일반적 의무) ① 본 규약의 각 당사국은 그 영역 내에서 그 관할권에 있는 개인에 대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 출생 또는 기타 지위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존중하며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24조(아동의 권리) ① 모든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국민적·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미성년자로서의 지위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짐,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가진다.

제27조(소수인의 권리)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해당 소수민족에 속하는 자는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자기의 문화를 향유하며, 자기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천하며, 자기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정당하지 않는다.

(4) 민족적 또는 인종적, 종교적 및 언어적 소수인에 속하는 자의 권리에 관한 선언<minority 권리 선언> (1992.12. 유엔 채택)

제1조(소수인의 권리) 민족적 또는 인종적, 종교적 및 언어적 소수인에 속하는 자는 사적 및 공적으로 자유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없이

…… 자기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4조(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 ① <유리한 조건의 창출, 단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거나 유엔 기준에 반하는 경우에는 한정하지 않음> ③ <모어를 배우거나 모어를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적당한 조치> ④ <소수인의 역사, 전통,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지식을 조장하기 위한 교육 조치>

(*< > 속의 내용은 요약한 것임)

(5) 세계언어권선언(1996.6. 세계언어권회의 채택)

제1조 이 선언이 ‘언어공동체’로서 이해하는 것은 그 공간이 인지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지역 내 공간에서 역사적으로 성립되며, …… ‘어떤 지역에서 고유한 언어’란 그와 같은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성립된 공동체의 언어를 말한다.

제3조 ① 이 선언은 다음에 열거하는 제 권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사하는 양보할 수 없는 개인적 권리로 이해한다.

- 어떤 언어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지될 권리
- 자기의 언어를 사적 및 공적으로 사용할 권리

.....

- 자기 문화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

② 제2조 2항에서 말한 조건에 따라 다음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 자기 언어와 문화의 교육에 대한 권리

- 통신 미디어에서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공평한 비율로 대표하게 할 권리

- 정부·행정기관과의 관계와 아울러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자신들의 언어에 의탁할 권리

제24조 모든 언어공동체는 유치원, 초·중등·기술·직업학교·대학·성인교육 등 자기 지역에서의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자신들의 언어를 얼마만큼 교수언어로 사용하며, 또 학습과목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3.2.2. 농교육, 수화, 아동의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

(1) 아동의 권리선언 (1959.11.20. 유엔 채택)

원칙 1 <언어를 포함한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2) 아동의 권리조약 (1989.11.20, 유엔 채택)

제1조 ① <어떠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이 조약에서 규정한 권리의 존중>

제30조 …… 언어의 소수인, ……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해당 소수인과 원주민에 속한 아동은 …… 자기 문화를 향유하며, ……또는 자기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정당하지 않는다.

(3) 농아동 및 난청아동을 위한 권리선언 (1992)

농아동과 난청아동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주어진다.

<요약> 기초가 되는 언어를 획득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조기교육 상담, 부모가 지도방침에 참여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롤모델(role model)을 제공받을 권리, 같은 장애를 지니는 친구들과 교류할 권리, 아동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아동과 능숙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교사·통역인을 배치받을 권리, 개개 아동의 요구에 보다 더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권리, 그들을 위한 교육환경에서 모든 프로그램에 완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농과 난청에 대한 의학적, 문화적, 언어적 문제에 관한 충분한 공적 정보를 얻을 권리

3.2.3. 그밖에 규약

(1) 국제인권규약 B규약 27조에 대한 규약인권위원회의 일반적 의견23(50): 소수인의 권리(1994. 4. 6. 유엔 채택)

조약 체결국 중 어떤 국가 내의 종족적, 종교적 및 언어적 소수민족의 존재는 당해 조약 체결국가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의해 정해질 것을 필요로 한다(이것으로 국가의 자의적 해석·운용을 막을 수 있다.).

(2) 장애인의 기회균등에 관한 국제 기준규칙(유엔 채택, 1993; 2001. 9 개정)

규칙 6 : ‘교육’ 9 - 농인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수화의 중요성은 인식되어야 하며, 또 모든 농인이 자기 나라의 수화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규정이 설정되어야 한다.

3.3. 헌법과 언어권

3.3.1. 권리인가, 정책인가(권리성의 유무)

언어의 문제를 모두 언어정책의 틀 속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언어정책의 이념으로서 언어권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언어권 보장을 확보하는데 적절한 언어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언어에 관한 제 권리가 이미 인식되고 있어, 예컨대 국제인권규약 B규약 제27조는 “자기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언어의 문제를 정책 이전에 권리의 문제로 보는 것이 국제적 인권의식에 합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3.2. 개인적 권리인가, 집단적 권리인가(권리의 향유 주체)

먼저 언어권이 개인적 권리인가, 집단적 권리인가 하는 점에 대한 문제가 있고, 여기에 헌법상의 인권으로서 적격성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헌법상의 인권을 개인이 아닌 집단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언어권의 기초에 있는 것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생각되므로, 기본적으로 언어권은 개인적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국제인권과 관련된 규약이나 선언 등에서 집단적 권리가 아니라 개인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언어권은 그 성질상 일정한 언어집단에 의한 사용이 예정되어 있으며, 또 언어권 주장이 언어적 다수인 집단에 의한 언어적 소수인 집단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하는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적 권리로서의 성질과 함께 집단적 권리로서의 권리 향유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에 ‘세계언어권선언’에서도 언어에 관한 개인적 권리를 선언하는 동시에 이른바 ‘언어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을 설정하여 거기에 일정한 권리의 귀속을 선언하고 있음은 같은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집단에 대한 권리 보장과 그 집단의 개인에 대한 권리 보장이 충돌할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 보장이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 권리로서의 언어권의 성질이 집단적 권리로서의 언어권의 성질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3.3.3. 권리인가, 헌법상의 인권인가(헌법상 인권으로서의 적격성)

언어권이 권리라는 것과 그것이 헌법상의 인권으로 보장된다는 것은 같지

않다. 여기서는 언어권이 헌법상 인권으로서 적격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헌법학에서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해석상 새로운 인권을 인정하는 것이 승인된다. 개인에게서의 언어(특히 제1언어 또는 모어로서의 언어)는 자기의 존재와 일체가 되는 것이므로 언어는 개인이 인격적 자율 존재로서 자기를 주장하며 그것을 이어나가는 데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권은 새로운 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적격성이 있다.

한편 인권으로서의 언어권을 ‘언어적 인권’이라 표현하는 입장이 있다. 이것은 ‘언어권(language rights 또는 linguistic rights)’과 ‘인권(human rights)’을 결합함으로써 ‘언어적 인권(Linguistic Human Rights)’³⁹⁾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3.3.4. 소수집단(minority)의 인권이라는 문제

국제인권법에서 소수집단 보호, 즉 소수인 보호는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으며, 언어권을 보호함에 있어 소수인의 언어라고 하는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소수집단의 개념이 분명치 않아 실은 국제법상에서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서도 국제법상의 소수집단은 반드시 수(數)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수에서 소수가 아니더라도 사회관계에서 계통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집단은 소수집단이라 할 것이다.

언어권 중 이른바 좁은 의미의 언어권은 언어적 소수인에 대한 제1언어의 보장을 의미한다. 여기서 좁은 의미의 언어권 보장은 소수집단의 언어권 보장 문제와 겹치게 된다. 이것은 헌법상 집단에 대한 인권 보장이라는 문제와도 겹치는데, 소수집단의 사람들 대부분이 그 배경에서 민족에 귀속되지만, 다원적 사회에서의 인권보장의 하나로서 이해하여야 하며, 언어권 주장을 민족성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3.3.5. 자유권인가, 사회권인가(권리의 성질)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자기의 언어를 사적 및 공적으로 사용할 권리”에 덧붙

역주 39) Rovert Phillipson & Tove Skutnabb-Kangas(1995)에서 ‘언어적 인권(Linguistic Human Rights)’은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으로 구분하여 그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수준에서의 언어적 인권이란 자신들의 모어가 다수언어이든 소수언어이든 간에 모어로서 긍정적으로 자기동일화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존중받는다는 것을 함의한다. 집단수준에서 언어적 인권이란 소수언어가 존속할 권리, 즉 ‘차이(差異)’의 권리를 함의한다.<Linguistic Rights and Wrongs, 木村 護郎 譯(1999), 言語的 不正と言語權, ことばへの權利, 東京: 三元社>

불여, “언어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권리”,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자기의 언어를 교육언어로 사용할 권리” 등을 들고 있다. 또, “언어권이란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언어집단이 사용하기를 바라는 언어를 사용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누구로부터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로 정의한 것도 있다. 이것들을 참고로 권리의 성질을 검토하면, ‘언어권’의 1차적 성질은 자유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언어적 소수인에게 있어서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사회권을 보장받는 것으로 국가로부터의 급부(給付)를 받는 것과 같은 의미에 있어 사회 내에서 자기의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을 국가가 갖추어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언어권은 사회권이기도 하다. 결국 언어권은 자유권과 사회권의 성질을 함께 지니는 복합적인 권리인 것이다. 또한, 언어적 소수인에게 있어 언어의 보장은 정치적 의사표시를 위한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이런 의미에서 언어권은 참정권적 성질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에서 언어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 것인가.

‘언어권’ 중 언어에 의한 차별의 부정은 헌법 제11조 평등조항에 의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에는 ‘언어’라고 하는 말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 조항의 해석으로 언어에 의한 차별은 부정된다고 할 수 있다.

※ 헌법 제11조 ① ……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여, 국제문서에 바탕을 둔 언어에 관한 권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바탕을 둔 권리로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헌법의 인권조항 해석을 통하여 ‘언어권’을 도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또 국제문서를 근거로 한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도 ‘언어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수화 관련 법령 현황

1. 우리나라의 법령 현황

‘세계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우리나라 안에서도 수화언어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변화가 공식적인 실체(언어 정책적인)로 드러난 것은 농학교 교육과정에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1983년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농학교 교육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화에 대한 언어의식에는 큰 변화가 없다. 여기에는 한국수화에 대한 언어태도의 문제를 비롯하여 언어습득(수화언어 습득)과 언어운용(수화언어 운용)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언어보다도 온전히 습득할 수 있고, 운용이 쉬운 수화언어(한국수화)를 지나침으로써 농아동의 언어권은 여전히 침해받고 있다. 넓게는 인권침해로서, 학습진도의 침해, 학력 신장의 침해, 대학 진학을 저조, 취업 직종의 제한, 심신발달의 저해, 농아동 부모의 가중 부담, 제1언어 또는 모어 습득 기회의 상실(村瀬嘉代子.1990. 聴覚障害心理臨床, 日本評論社; 河川佳子.2000. 手話臨床, ミネルヴァ書店)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농아동(농인)의 언어권은 법적으로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가. ‘장애인복지법’과 최근 법제화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약칭함)에서는 수화통역을 중심으로 한 정보접근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 ‘수화’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언어로서 수화를 인식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언어 환경(수화언어 환경)이 보장되기만 한다면, 한국수화는 완전수용이 가능한 언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손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제한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언어습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청년기 이후의 언어생활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른바 세미링구얼(semilingual)의 상태가 됨으로써 한국어와 한국수화 어느 쪽에도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기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상태는 이념이 결여된 단순 언어정책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이중언어(bilingual)를 바탕으로 하는 농교육과 소수 언어공동체를 배경으로 하는 농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한 법적 대응이 주요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상황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장애인의 기회균등에 관한 유엔 기준규칙’에 대한 각국의 상황을 조사 보고한 유엔 문서의 말미에 각국 정부를 상대로 자국 수화언어에 대해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수화언어를 공용어로 인식하고 있는지의 여부, 농교육에서 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간주하는지의 여부, 수화언어를 농인과 다른 사람들과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간주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답은 모두 긍정이었다(김철관, 2005a, 수화교육의 전향적 검토 재론, 한국수화학회 제7회 학술대회 자료집에서 재인용). 그러나 설문에 대한 이와 같은 긍정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수화가 법적으로 공인언어의 지위를 획득함으로써만 가능할 것이다.

현행법상 수화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장애인복지법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수화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방송국의 장 등 민간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수화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수화통역** 및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23조(편의시설)

② 편의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화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4조(안전대책 강구) 안전대책 강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2.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에서 청각장애인의 언어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총칙

제3조(정의) 제8호 나목

“비전자정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항 제6호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 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 제2장 제2절 교육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항 제4호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등 의사소통 수단

· 제2장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 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해설·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① 장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 대하여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4.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은 제1장 총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청각장애인 중 청각을 통하여 언어를 습득하고 학습하기 어려운 농인들에게는 제4조 제2항의 내용처럼 농인들이 제1언어인 수화를 습득하여 제2언어인 한국어를 습득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사회의 평생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교육현장에서 수화를 배우지 못한 교사가 농학교 교사가 되며, 사회교육도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는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며, 각 나라의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여 농인들이 제한적 환경에서 2차 언어인 국어보다 1차 언어인 수화를 습득하게 한 후 한국어를 습득하게 할 필요가 있다.

1.5. 기타 - 장애인 인권선언문

2008년 장애인 인권선언문(2008.12.3)에서 청각장애인의 언어를 언급한 것은 제18조에서 “청각장애인은 수화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권리가 있으며, 수화는 공식적 언어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였다.

2. 외국의 법령 현황

2.1. 배경

2.1.1. 유럽 지역

수화의 공인과 관련한 특별법(다른 법률과의 분리 입법) 제정은 유럽에서부터 일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수화에 대한 유럽의회 결의」(1988), 「플렌스부르크 권고」(1998) 및 「브뤼셀 선언」⁴⁰⁾(2010)과 직간접

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에서도 가장 먼저 자국 수화를 공인한 나라는 체코이다. 체코의회는 1988년 체코 농인의 제1언어로서 체코수화를 공인⁴¹⁾하였다.

수화 관련 특별법 제정은 1990년대 중반에서부터 실제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는데, 슬로바키아와 체코에서의 법률 제정이 그 효시이다. 「슬로바키아 농인의 수화에 관한 법률」⁴²⁾(1995), 「체코 수화언어법」⁴³⁾(1998) 등은 수화 통역에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성격은 향후 수화언어법 제정에 하나의 길잡이가 되었다. 「슬로베니아 수화 사용에 관한 법률」⁴⁴⁾(2002), 「헝가리수화와 헝가리수화 사용에 관한 법률」⁴⁵⁾(2009) 등에서 특히 수화 통역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2010년 현재⁴⁶⁾ 키프로스,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카탈루냐(스페인) 등이 수화언어 관련 법률(분리 입법)을 제정한 국가(지역)에 포함되었다. 특히 카탈루냐의 경우는 지방정부(자치주) 수준에서의 수화언어법 제정이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이들 국가와는 달리 비교적 뒤늦게 법률을 제정한 국가로는 아이슬란드가 있다. 아이슬란드는 앞의 경우와는 달리, 「아이슬란드어와 아이슬란드수화의 지위에 관한 법률」⁴⁷⁾(2011)에서 국어인 아이슬란드어와 농인의 제1언어인 아이슬란드 수화의 법률적인 지위를 확인한다.

좀 더 포괄적인 입법을 통해 수화언어의 공인과 지위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핀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⁴⁸⁾에서는 자국 언어법의 틀 속에서 수화언어의 공인과 사용자의 권리를 정하고 있다.

2.1.2. 유럽 이외의 지역

Hilde Haualand 등(2009)에서 수화언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는 44개 국가(서유럽, 북미 등 제외) 중 한두 개의 법률을 통해 수화언어를 언급하고 있는 곳은 19개국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 지

40)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 모두에서 수화언어법의 법제화 실현을 바라고 있다. 이에 「브뤼셀 선언」의 목적은, 이의 실현이며, 각국의 행정기관과 의회는 수화언어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수화언어 관련 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전일본농아연맹, 2012에서 재인용).

41) www.handspeak.com/tour/byte/index-ref.php?byte=signhistory

42) www.handspeak.com/tour/byte/index-ref.php?byte=signhistory

43) www.deafvoc2.eu/deafvoc1/pages/products/Survey/Supplement/Czech

44) www.un.org/disabilities/documents/COP/compilation_1september.

45) www.fszk.hu/fszk/tudastar/jogszabaly/hazai/A_jelnyelvi_torveny_angolul.

46) Wheatney & Pabsch(2010)/www.eud.eu

47) www.eng.menntamalaraduneyti.is/media/MRN-pdf/Icelandic-Language-Act-tr-260711.

48) www.eud.eu

역에서의 수화언어 관련 특별법은 주로 장애인권리협약의 성립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⁴⁹⁾되는데, 뉴질랜드 수화언어법(2006)과 니카라과 수화언어법(2008)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말레이시아 장애인법(2008)이 특기할만한데, 이 법률은 종합법이면서도 수화언어의 공인과 그 사용자들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다.

2.2. 개별 법령 현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화언어법으로 통칭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표준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성격과 틀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수화언어의 공인, 지위, 사용자의 권리 등을 특히 강조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수화통역을 중심으로 농인의 접근권에 무게를 두는 경우도 있다. 또, 이와 같은 성격들을 망라하는 종합형도 있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성격을 비교적 고루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개별 법률을 선정하여 특징적 성격과 내용 구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개별 법률로는 슬로바키아 수화언어법, 뉴질랜드 수화언어법, 헝가리 수화언어법, 아이슬란드 수화언어법 및 카탈루냐 수화언어법 등을, 종합법으로는 말레이시아 장애인법과 성안 단계에 있는 일본 수화언어법을 선정하였다.

2.2.1. 슬로바키아 수화언어법

2.2.1.1. 배경

슬로바키아는 체코와 연방을 이루는 한 나라였으나 1993년 분리 독립하였다. 슬로바키아수화는 오스트리아·폴란드·체코수화의 영향을 받았다. 1995년의 법률에 따라 농학생들은 그들의 모어인 슬로바키아수화로 교육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슬로바키아수화는 소수민의 언어(minority language)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Timmermans, 2003; Bickford, 2005). 슬로바키아수화를 사용하는 농인의 수는 약 9천명이다(www.eud.eu, 2013).

「농인의 수화언어에 관한 법(Law of the Sign Language of the Deaf 149/1995)」은 세계 최초의 수화언어 관련 독립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2.1.2. 구성 및 범위⁵⁰⁾

49) www.un.org/disabilities/default.asp?id=1487

[목적] 수화(수화 사용)를 농인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인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조건의 보장(제1조).

[농인의 정의] 보청기를 착용하더라도 음성언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한 사람(제2조).

[수화의 정의] 농인의 커뮤니케이션 언어로서, 자연스러운 시각·동작적 언어체계(제3조).

[수화 사용 권리] 수화사용, 수화에 의한 교육, TV 방송·도서관·비디오 등 정보 이용, 수화통역 등에 관한 권리 보장(제4조).

[수화통역] 수화통역 이용의 권리, 수화통역인의 통역 보장(제5조)

[시행규칙(복지부)] 통역 등의 무료 서비스의 범위, 수화통역 양성 범위와 내용 등(제6조).

2.2.2. 뉴질랜드 수화언어법

2.2.2.1 배경

뉴질랜드의 민족 구성은 전체 인구 426만 명 중 유럽계가 약 81%, 원주민(마우리) 약 15.2%, 아시아인 약 9%이며,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의 수는 약 5천명(전체인구의 약 0.001%) 정도이다(大杉 등, 2011에서 재인용).

「뉴질랜드 수화언어법(New Zealand Sign Language Act 2006)」 입법을 위한 예비적 기반으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마우리어법(Maori Language Act 1987)의 성립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유인으로 꼽을 수 있다. 1993년의 인권법에서 언어권을 민족지학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농인의 경우 소수민족 집단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수화언어는 원주민의 음성언어⁵¹⁾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공적인 서비스에 접근함에 있어 그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강화하고자 한 데 있다. 2004년의 교육법은 언어의 인권이라는 측

50) 나가세(長瀬, 1997)의 번역본 참조

51) 여기서 원주민의 언어는 물론 마우리어이다. 마우리어법과 뉴질랜드수화언어법의 비교(McKee, 2005-2006:144)에서 재인용)에서 보면, 공용어, 법적 절차에서의 사용, 통번역, 사용 촉진, 관련 위원회 구성 등에서 거의 일치하고 있다. 다만, 마우리어의 경우 마우리어 능력 평가, 통번역인의 자격 인증 등이 포함된다.

면에서 수화언어를 다시금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McKee, 2005-2006; 2011).

뉴질랜드수화의 연원은 호주유사수화체계(Australian Signed English)에서 비롯된다. 이 방법은 토털커뮤니케이션과 함께 1970년대 말부터 뉴질랜드의 새 농학교에 유입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뉴질랜드농인연맹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1990년대 초까지는 농인연맹의 정책적 변화에 따라 자연수화로서 뉴질랜드수화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McKee, 2005-2006; Collins-Ahlgren, 1990). 뉴질랜드수화는 영국·호주수화와 같은 계통⁵²⁾으로 본다.

2.2.2.2. 구성 및 범위⁵³⁾

[목적] 뉴질랜드수화의 사용 촉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4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방법은 (a)뉴질랜드수화의 공용어(official language) 선언, (b)법적 절차에서의 뉴질랜드수화 사용 규정, (c)법적 절차에서 뉴질랜드수화의 적격성 기준 결정을 위한 규칙 제정 권한의 부여, (d)뉴질랜드수화의 사용과 촉진을 위한 정부 부처의 지도원칙을 정하고 있다(3조).

[정의] 이 법에서는 해석(interpretation)이란 개념으로 농인공동체, 다른 언어와의 관계, 정부 부처, 법적 절차 및 번역 등을 정의하고 있다(제4조). 수화언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정의(해석)를 보면 다음과 같다.

농인공동체(Deaf community) : 뉴질랜드수화를 그들의 제1언어 또는 선호 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집단과 농문화 양쪽에서 정체성을 지니는 청각장애인의 언어·문화집단을 의미한다.

뉴질랜드수화(New Zealand Sign Language) : 별개의 언어·문화집단인 뉴질랜드 청각장애인 집단의 제1언어 또는 선호 언어로서 시각·몸짓(visual gestural)언어이다.

[공용어] 영어, 마우리어에 이은 세 번째로 뉴질랜드수화가 공용어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이 법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적 절차와 정부 부처의 지도원칙] 법적 절차에서의 수화언어 사용은 권리로 정하고 있는 데 비해, 그 밖의 정부 부처에서의 수화 사용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52) Swadesh의 어휘항목과 유사하거나 같은 것의 범위는 뉴질랜드수화와 호주수화 사이에서 87.96%, 영국수화와 뉴질랜드수화 사이에서 79.96%로 나타났다(McKee 등, 2000; Johnston 등, 2003).

53) www.legislation.govt.nz/act/public/2006/0018/latest/096be8ed802280f3.pdf , ODI, 2011

정부 부처의 지도원칙은, 수화에 관한 문제는 농인공동체의 의견을 구하고, 대국민 홍보 및 정보 제공에 뉴질랜드수화 사용, 수화언어를 포함한 적절한 방법으로 정부 정보에의 접근 등이다.

2.2.3. 헝가리 수화언어법

2.2.3.1. 배경

헝가리는 헝가리수화를 사용하는 농인⁵⁴⁾이 3만 명 또는 6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며, 헝가리수화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30만 정도의 난청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ethnologue, 2013). 1802년에 첫 농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이때 오스트리아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오스트리아수화와 헝가리수화는 같은 계통⁵⁵⁾으로 분류하며, 독일수화, 유고슬라비아수화와도 관계가 있다(Bickford, 2005에서 재인용).

「헝가리수화와 헝가리수화 사용에 관한 법(Act on Hungarian Sign Language and the use of Hungarian Sign Language)」이 성립된 직접적인 계기는 장애인권리협약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 법률의 전문 형식의 제정 취지에서 확인하고 있는데, 이 법률 제정의 취지는 농인과 농맹인(deaf blind person)들의 공공 서비스에의 평등한 접근과 언어권 하에서 문화와 농인공동체 구축의 힘인 수화언어를 인정함으로써 평등권을 가지고 있는 헝가리 사회의 성원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권리와 동등한 기회에 관한 법률」(1998)이 제정(수화언어법 수정 관련 조항 참조)되어 있었으므로, 이 또한 수화언어법의 바탕이 되었을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2.2.3.2. 구성 및 범위⁵⁶⁾

[목적] 헝가리수화의 언어적 지위를 인정하고, 농인과 농맹인이 헝가리수화와 특수 커뮤니케이션 체계⁵⁷⁾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국가의 재정으로 수화통역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은 농인뿐만 아니

54) 농인유럽연합(EUD) 홈페이지 회원국 자료에서 확인되는 바로는 헝가리수화 사용자로서 농인의 수는 9,000명으로 되어 있다.

55)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Austro-Hungary empire) 시기를 통해 헝가리수화는 체코, 슬로바키아 등과 함께 오스트리아수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따라서 헝가리수화의 계통을 'Austro-Hungary Sign Language'라 한다(Bickford, 2005).

56) www.fszk.hu/fszk/tudastar/jogszabaly/hazai/A_jelnyelvi_torveny_angolul.pdf

57) 이 법의 부속 조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수 커뮤니케이션 체계는 촉수화(dactile sign language), 유사수화체계(signed hangarian language), 지화, 손잡고 지문자 구성하기, 헝가리 구어의 시각화, 헝가리어 필기, 촉수 지문자(지점자), 손바닥에 쓰기, 점자 쓰기, 촉수 점자 쓰기, 타도마법(목소리 진동 감촉) 등이다.

라 농맹인을 포함한다(제1조).

[**목적**을 위한 용어의 정의] 여기서는 농인, 농맹인, 헝가리수화, 특수 커뮤니케이션 체계, 공공 서비스 활동, 이중언어 교육 방법, 청각구화 교육 방법 등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그중에서 농인, 헝가리수화, 공공 서비스 활동 등의 몇 가지 정의를 들면 다음과 같다(개요).

농인 : 농 또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헝가리수화를 사용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특수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사용하는 사람을 뜻한다.

헝가리수화 : 시각언어 기호로서 특수한 문법체계와 규칙으로 되어 있으며 농인공동체에 의해 사용되는 헝가리에서 발달한 독자의 자연언어를 뜻한다.

공공 서비스 활동 : 공식적, 정치적, 행정 사범 활동을 뜻한다. 여기에는 법 시행과 관련된 제반 활동이 포함된다(제2조).

[**수화언어의 공인** 등] 독자의 자연언어로서 헝가리수화를 국가(헝가리 공화국)가 인정한다는 것과 헝가리수화 사용자들의 공동체는 농문화를 전승, 확산시키는 것과 같이 헝가리수화의 발전과 사용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제3조).

[**무료 수화통역 서비스**] 무료 수화통역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헝가리 시민, 정착 이민 등의 농/농맹인으로서 장애수당, 청력손실 정도 등 구체적인 기준(제4조), 일반인의 무료 수화통역 이용 연간 시수, 후기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기관의 재학생에 대한 무료 수화통역 이용의 학년 또는 학기당 시수의 제한 등(제5조), 공공재단(Public Foundation)에 의한 무료 수화통역 이용 시수 제한 및 기록 관리 등(제6조)을 명시하고 있다.

[**수화통역 서비스**] 무료 수화통역 서비스 외에 국가가 재정 지출을 하는 통역 요청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한다(제7조).

[**수화통역사의 국가 관리(명단)**] 무료 수화통역 수행 목적과 이에 부합한 통역의 도덕성, 자격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명단(National List of Sign Language Interpreters)의 작성, 관리(5년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제8조).

[비밀성] 수화통역사의 비밀 사항 취급과 이에 대한 수비(守秘)의무 등을 규정(제9조)하고 있는 것으로서, 수화통역사의 일반적 윤리강령과 유사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재정 규칙] 무료 수화통역을 위한 공공재단의 기금 등을 비롯하여 공공 서비스 및 공교육 기관에서의 구두시험 등에서의 재정 자부담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수화 및 특수 커뮤니케이션 체계 학습에 관한 규칙] 농인, 농맹인의 형가리수화 또는 특수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사용과 교육 기회의 제공(제11조), 학교급별 교육기관에서의 수화 등의 교육과 지도교사의 전문성 등(제12조), 교육과정에서의 반영, 학부모 지원 등(제13조)을 명시하고 있다.

[농아동 교육에 관한 특별 규칙] 농아동의 조기 발달을 위한 학부모의 선택, 즉 이중언어 교육과 청각구화법 중에서의 선택과 이에 관한 간단한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제14조).

그 밖에 기존 법률과의 관계에서 수정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1998년 장애인법 제12조의 수정은 이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첨가할 사항은 「미성년자의 장애를 확증할 때, 의사 또는 의사가 인정한 의료종사자는 신속히 보호자에 대해 이용 가능한 수당 및 발달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회적 평등 촉진 담당 장관은 이와 같은 정보를 게재한 간행물을 제공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이는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편향성에서 오는 기회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법 제12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2.4. 아이슬란드 수화언어법

2.2.4.1. 배경

1999년 아이슬란드 교육부가 발표한 기본교육과정 내용에 따르면, 농인들의 제1언어는 아이슬란드수화이며, 그들의 제2언어는 아이슬란드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농아동들은 아이슬란드수화를 제1언어로, 아이슬란드어를 제2언어로 학습한다. 교육과정에서 수화는 농아동들의 언어와 인지, 그리고 인격 발달에 기본적인 의미를 둔다(Timmermans, 2003,

2005). 유럽농인연합(www.eud.eu, 2013) 회원국 자료에 의하면, 아이슬란드 수화 사용 농인은 250명이고, 수화통역사가 27명이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아이슬란드어와 아이슬란드 수화언어의 지위에 관한 법(Act on the Status of the Icelandic Language and Icelandic Sign Language)」이 제정(2011)되었다.

2.2.4.2. 구성 및 범위⁵⁸⁾

이 법률은 전문 14조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국어-공용어(제1조), 아이슬란드어(제2조), 아이슬란드 점자(제4조), 아이슬란드어 위원회(제6조), 행정 당국의 공용어(제8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언어정책(제10조), 전문적, 기술과 학 용어(제11조), 국제권에서의 공용어(제12조), 적용과 조항 폐지(제14조) 등을 제외하고, 수화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그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슬란드 수화] 아이슬란드 수화언어에 의한 표현과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과 그들 자녀들의 제1언어이고, 정부 당국은 이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 수화언어를 사용하며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슬란드수화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과 이는 청각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도 해당되는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제3조).

[언어정책(수화언어)] 아이슬란드 중앙 및 지방 정부 당국은 아이슬란드수화의 보급, 개발, 연구, 지도를 장려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농인, 난청인, 농맹인의 인식을 제고한다. 언어정책과 아이슬란드수화의 지위를 주지하며, 아이슬란드수화위원회와 더불어 협동을 모색한다. 교육과학문화부는 이 법의 이행을 감시한다. 이를 위해 개별 행정 기관의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제5조).

[아이슬란드수화위원회] 장관은 4년에 한 번 아이슬란드 수화위원회의 5명의 위원을 임명하며 대체위원의 수도 같다. 위원을 임명할 때는 아이슬란드대학교 인문학부, 농·난청커뮤니케이션센터, 아이슬란드 농·난청비정부기구, 아이슬란드 지방정부연합과 상의하여야 한다. 장관은 아이슬란드수화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정한다.

아이슬란드 수화위원회의 역할은 아이슬란드 수화에 관한 모든 종류의 문제에 대한 조언 및 개발 지원, 아이슬란드 국민의 생활 속에서 아이슬란드

58) www.eng.menntamalaraduneyti.is/media/MRN-pdf/Icelandic-Language-Act-tr-260711.pdf

수화와 그것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부 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아이슬란드수화위원회의 사무실 위치] 장관은 아이슬란드 수화위원회 활동에 더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

[행정 당국에 대한 통역 및 수화통역] 통역 서비스에 대한 권리 및 통역사와 수화통역사의 원조를 요청할 법원의 의무는 민·형사소송법에서 정한다(제9조).

[아이슬란드수화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의무]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아이슬란드수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중앙 및 지방 정부 당국은 아이슬란드수화를 보전 개발하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도록 할 책무를 진다. 먼저 전문적, 기초과학기술 용어와 그것의 사용에서 아이슬란드수화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이슬란드수화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표현, 언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개인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데서 아이슬란드어와 동등한 지위에 있다(제13조).

2.2.5. 말레이시아 장애인법

2.2.5.1. 배경

말레이시아수화는 많은 지역적 변이⁵⁹⁾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농학교를 중심으로 자생한 토착의 수화로 페낭수화(Penang Sign Language)가 있다. 1960년대에 이미 미국수화가 도입됨으로써 말레이시아수화에 영향을 미쳤다. 말레이시아수화(Malaysian Sign Language)는 Ethnologue에 등재(1996)되면서 붙은 이름이다(Hurbut, 2003).

비교적 일찍부터 농학교에서 수화가 사용되고는 있었으나, 2008년 장애인법이 성립되기까지는 언어 또는 교육 관련법에서 수화가 언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Hurbut, 2003;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사무국, 2009). 2008년의 말레이시아 장애인법은 종합법적 성격을 띠으로써 농인의 수화언어와 관련된 조항은 이 법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2.2.5.2. 구성 및 범위⁶⁰⁾

59) 말레이시아수화의 지역적 변이는 쿠알라룸푸르 등 14개 지역에 걸쳐 있는데, 이들 지역적 변이와 미국수화와의 유사성 비율은 55~8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페낭수화는 4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냄으로써 토착의 특성을 보여준다(Hurbut, 2003).

60) www.rehabmalaysia.org/wp-content/.../PwD-Act-2008.pdf

이 법은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화언어와 관련된 내용은 제1부 전문과 제4부 제1장 접근성에 집중되어 있다.

[통역] 언어에는 구어 및 수화, 말레이시아수화, 그 밖의 비음성 언어형식이 포함된다.

말레이시아수화란 말레이시아 농인들을 위한 공용수화언어(official sign language)를 뜻한다(제2조).

[교육에의 접근] 교육에서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 수화언어의 학습을 촉진하며, 농인공동체의 언어 정체성을 돕는다(제28조 3b).

[정보, 통신 및 기술에의 접근]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말레이시아수화 및 점자 사용을 촉진하며, 장애인들에 의해 선택된 모든 대체 의사소통 수단과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수락하여야 한다(제30조 3).

[문화생활에의 접근]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수화와 농문화를 포함한 그들의 특수한 문화와 언어 정체성을 인정받고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제31조 4).

2.2.6. 일본 수화언어법(안)

2.2.6.1. 배경

수화언어를 중심으로 볼 때, 일본에서 수화언어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 극단적인 측면에서 엇갈린다고 할 수 있다. 그 한 가지는 농교육을 포함하는 언어정책에서의 전통적 관점이고, 다른 한 가지는 「농문화 선언」으로 대표되는 농인과 수화언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장애인기본법의 개정(2011)으로 수화언어법의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이 법률에서는 언어에 수화가 포함되었다(전일본농아연맹, 2012).

일본에서 수화 사용 농인의 수는 약 5만(전체 인구 대비 0.04%)으로 추산한다(전일본농아연맹, 2012에서 재인용). 이치다 등(市田 등, 2001)의 연구에서는, 일본수화 원어민(모어 화자)의 수를 약 5만 7천 명으로 추산한다.

2.2.6.2. 구성 및 배경⁶¹⁾

61) <http://www.jfd.or.jp/info/misc/sgf/20120409-sgf-houan.pdf>

이 법은 총 6장 21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제2장 수화언어의 획득 및 습득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고 있으며, 제3장 수화의 사용은 각 영역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들 영역의 사용자들의 권리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수화의 날」 관련 조항은 매우 특색적이다. 이에 전체 구성 범위를 중심으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목적] 일본수화를 일본어와 동등한 언어로 인지하고, 농인들이 모든 생활 영역의 장에서 수화를 사용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수화에 의한 풍부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수화의 획득과 습득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 계획적 추진을 도모한다(제1조).

[일본수화] 일본 농인이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독자 언어체계의 언어를 가리키며, 풍부한 인간성 함양 및 지적이며 동시에 마음이 넉넉한 생활을 보내기 위한 언어활동의 문화적 소산이다(제2조).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의 책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화언어 활동 및 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이며 계획적 실시 의무(제3조)를 규정하고 있다.

[수화 획득 및 수화 습득⁶²⁾] 유아를 포함한 농아동의 수화 획득 기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제3조 1항). 수화 획득과 수화 획득 과정을 선택하는 아동, 부모 및 가족에 대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필요한 정보 제공 의무(제5조 2, 3항), 발달단계에 따라 수화 학습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는 교육과정에 수화를 자리매김하고, 농학교에서는 이를 필수교과로 한다(제6조 1,2항). 그 밖에 농학교 이외의 학교 재학 농학생에 대한 조치, 중도실청 농인의 수화 학습 기회보장, 일본어에 의한 문자정보 및 수화로 번역한 영상 제공 등(제6조 3-5항)을 규정하고 있다.

[수화 사용] 수화로 교육 받을 권리의 보장, 수화 사용 교직원의 배치, 교원 양성 과정에서의 수화교육 등을 위한 사항을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의무로 정하는 한편, 농아동(농유아 포함)의 요육 및 교육에서 수화와 일본

62) 이 법에서 말하고 있는 습득은, 'learning'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까닭은 획득, 즉 'acquisition'이 동시에 제시되어 있다는 점과 조항에서는 '학습'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어에 의한 교육 추진을 제시함으로써 이중언어교육을 언급하고 있다(제7-8조). 그 밖의 통신, 공공시설 이용, 정치 참가, 사법 절차, 노동 및 고용, 민간 시설 이용, 방송, 문화 및 스포츠 등에서의 수화 사용 보장 등(제9-16조)을 규정하고 있다.

[수화통역제도] 이용료의 부담 없는 수화통역의 이용 기회를 보장한다(제17조 1항). 그 밖에 수화통역의 배치, 수화통역 자격 인증 등(제17조 2-4항)을 규정하고 있다.

[수화심의회]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수화언어 계획 및 정책에 대한 주요사항 심의와 총리 및 관계 장관에 대한 의견 진술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심의위원은 수화학, 교육학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내각부에 수화심의회를 둔다(제18조).

[수화연구소] 연구소의 기능은 수화의 발전, 사용, 보급 및 추진을 위한 지속적 연구 및 조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9조).

[수화의 날, 국제교류] 수화의 날 제정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역할을 규정(제20조 2-3항)하고 있으며, 수화문화의 국제교류, 국내외 수화 번역 지원 등(제 21조)을 규정하고 있다.

3. 비교법적 고찰

앞에서 살펴본 6개국의 수화언어 관련법은 법률 제정의 목적, 농인의 언어권과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공통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세부적으로는 차이를 드러낸다. 공통성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수화를 별개의 언어 체계로 본다는 것과 교육에서의 수화 사용 권리이다. 이것을 요약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표 3.2.> 수화 관련법 특성 비교

관련 수화	구분	대상	특 성
슬로바키	분리	농인	○수화를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봄

아수화 뉴질랜드 수화	입법	농인	○수화의 사용과 교육·정보에의 접근 ○수화에 대한 공용어 선언 ○수화번역에의 새로운 접근
헝가리 수화	"	농인, 농맹인	○수화, 특수커뮤니케이션 체계 망라 ○무료수화통역과 전문 수화교사 등 ○이중언어교육 ○교육방법 선택권 수화의 획득
아이슬란드 수화	"	농·난청인 및 농맹인	○국어와 동등한 언어로서의 지위 ○수화위원회의 구성 ○수화언어에 대한 국가의 책무
말레이시아 아수화	종합 입법	농인	○수화는 말레이시아 농인의 공용어 ○교육, 정보통신, 기술 및 문화생활 에의 접근
일본수화	분리입 법(안)	농인	○수화의 습득과 학습 기회의 보장 ○이중언어교육(희망) ○수화심의회 ○수화의 날 제정

수화 관련 법령 제정 현황

나라	수화 혹은 수화 사용자와 관련한 법안들
벨기에	1998년 기본 교육에 관한 법령, 2003년 수화의 공식 인정에 대한 법령
체코 공화국	1998년 6월 11일의 155번 법률 n°
덴마크	1991년 교육 법령
핀란드	핀란드 수화와 관련한 아래 문단을 참조할 것
독일	2001년 특별법령 제9항, 2002년 장애인들의 기회균등에 관한 법령
그리스	2000년 3월 14일, 제2817호 특수 교육법
아일랜드	1998년 교육 법령
이탈리아	법률 104의 92조, 17의 99조
리투아니아	1991년 장애인들의 사회통합 법령, 1995년 1996 장애인들의 해를 선언하는 것과 관련한 법령
노르웨이	1997년 초등 교육 법령, 1999년에 수정된 1998년 교육 법령

폴란드	장애인들의 직업 및 사회재활과 고용에 관한 1997년 8월 27일의 법령
포르투갈	20002/8항에 의해 수정된 법률 31-A의 98항, 1999년 3월의 380호 법률
슬로바키아 공화국	청각장애인 법률을 위한 수화에 관한 1995년 149호 법령
슬로베니아	2002년 슬로베니아 수화 사용 법령
스페인	1995년 20의 60항 왕립 법령, 1995년 696호 왕립 법령
스웨덴	1998년 교육 법령, 1999년 11월 수정안 1100호, 수정된 1982년 보건 및 의료 서비스에 관한 법령
스위스	수정된 보험에 관한 1959년 6월 19일의 연방법
영국	1984년 경찰과 범죄 증거 법령, 1979년 평화 법령, 1990년 공동체 보호 법령, 1996년 방송 법령, 1995년 장애인 차별 법령, 2000년 국민의 대표 법령

IV. FGI 분석

1. FGI 진행 경과

‘(가칭)한국수화언어기본법’ 연구를 위한 학계 및 현장전문가 등 총 21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고 분석하였으며, 이를 법률안 연구의 내용과 방향에 적용하였다.

1.1. FGI 실시방법

책임연구자의 진행으로 FGI 질문지의 질문들에 대해 형식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듣고, 서면 답변과 함께 다양한 의견들을 주로 청취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은 수화통역, 문자통역, 녹음, 수기 등의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1.2. FGI 질문지

<포커스그룹 질문지>

1. 최근에 수화 관련 법(여기서는 편의상 ‘수화언어법’으로 지칭함) 제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수화언어법의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필요하다면(또는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2. ‘수화, 수화언어, 수어’ 등 유사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 이들 용어 중 법적인 용어로는 어느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3.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로 적합한 단어가 무엇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예컨대, 농인, 농아인, 청각장애인, 난청인 등...)
4. 농문화 및 농정체성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개념, 의미 등 등...)
5. 수화언어의 교육·보급과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국가적 계획 및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하는지 의견을 주시고, 이 수화 정책을 관장할 적합한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6. 수화, 농문화 및 농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필요하다면 그 전문기관의 적합한 명칭(예컨대, 한

국수화언어연구소, 농문화연구소, 청각장애인복지연구소 등)과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면 좋을지 말씀해주세요.

7. 수화언어법에서 수화 통·번역 관련 제도, 문자통역/속기의 지원의무와 서비스 등이 어떤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포함할 필요가 없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요.

8. 그밖에 수화언어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고, 향후 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 예상되는 변화와 기대하는 바램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9. 마지막으로 수화 관련 법률의 명칭으로 무엇이 적합한지, 그 이유와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화언어법, 한국수화법, 한국수어법, 한국수화기본법, 한국수화언어기본법, 한국수화 보급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하여 바람직한 수화 관련 법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FGI 분석 결과

2.1. 조사 대상자

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참여자는 총 21명이었으며, 농인은 7명, 청인은 14명이었다. 그리고 남성은 12명, 여성은 9명이었다.

<표 4.1.> FGI 참여자

사례유형	농유무	성별	소속 및 직위
참여자1	농인	남	농학교 임원
참여자2	농인	남	농아인협회 지부장
참여자3	청인	여	대학교수
참여자4	농인	여	농아인협회 임원
참여자5	청인	여	전 농아인협회 임원
참여자6	청인	남	장애인 단체 팀장
참여자7	농인	여	농아인협회 지부장
참여자8	청인	남	특수교육기관 연구원
참여자9	청인	남	장애인 단체 팀장
참여자10	청인	남	수화통역사

참여자11	청인	여	장애인부모회 임원
참여자12	청인	남	대학교수
참여자13	청인	남	장애인 단체 팀장
참여자14	농인	여	장애인기관 연구원
참여자15	청인	남	변호사
참여자16	청인	여	교육부 연구원
참여자17	농인	남	대학원생
참여자18	농인	남	대학원 석사 졸업
참여자19	청인	남	복지관 팀장
참여자20	청인	여	농아인협회 임원
참여자21	청인	여	언어학 연구원

2.2. 코딩분석 결과

FGI 인터뷰에 대한 코딩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2.> FGI 코딩분석표

범주화	개방코딩
법 제정의 필요성	수화의 언어적 권리 보장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수화와 농인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 해소
수화용어의 재정립	수어가 적합함
	수화가 적합함
	수화언어가 적합함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해야 함
농인용어의 재정립	농아인이 적합함
	농인이 적합함
	청각장애인이 적합함
	새로운 용어정립이 필요
	제1언어의 정의가 모호함
농문화의 정의와 지원의 필요성	농문화의 중심은 수화임
	농문화의 정의 재정립 필요
	농문화 지원이 필요함
수화기본법을 담당할 주무부서 선호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적합함
	타부서가 적합함
	다양한 부처에서 분담
	법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함
법안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논의	수화교육
	음성언어(한국어)와 수화를 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농문화연구소 및 수화연구소 설립
	문자통역/속기 서비스 지원 필요

	수화통역 서비스받을 권리 명시 및 지원 필요
	수화의 언어권 침해 방지 장치 마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수화의 보편적 사용 환경 조성
법의 방향	한국수어의 제대로 된 사용문화 장려
	농인 당사자의 관점이 반영
	다양한 의사소통 지원으로 접근
	기존법과의 중복을 피하고 누락된 부분을 보완
법의 적용 대상자	수화를 사용하는 청인도 포함
	난청인 및 청각장애인도 포함
	언어장애인 포함
	모든 국민도 포함
법률명에 대한 논의	한국수화법
	쉬운 언어로 제정 필요
	수화를 둘러싼 다양한 지원 포괄의 개념으로 명칭정의

2.3. 범주별 분석 결과

2.3.1. 법 제정의 필요성

○ 수화의 언어적 권리 보장

기존의 장애 관련법들에서는 수화통역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항이 있었지만, 언어인 수화를 사용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수화언어법에서 이것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농인도 한국어를 사용하는 청인과 동등하게 언어인 수화를 사용하고 같은 권리를 누릴 당위성이 있으며, 수화가 단순히 특수 언어가 아니라 공식 언어로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과들이 나왔다.

○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수화언어법을 통해 청각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고, 사회참여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화언어법을 통해 농아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과들이 나왔다.

○ 수화와 농인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 해소

그동안 수화와 농인은 음성중심의 이데올로기로 많은 억압을 받아왔고, 사회구조가 농인을 소외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농인이 청인과 동등하게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화언어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결과들이 나왔다. 더불어 수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수화언어법 제정을 통해 인식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과도 있었다.

2.3.2. ‘수화’ 용어의 재정립

○ ‘수어’가 적합함

‘수화’는 일본 식민지 시절 때 사용한 단어이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있고, 기존의 농인과 관련된 단어들은 부정적인 단어에서 점차 중립적인 단어로 변화된 것처럼 ‘수화’를 ‘수어’로 계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어’를 언어로 인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수어’를 사용하자는 결과가 있었다. 그리고 ‘수화’는 대화라는 의미가 있고 ‘수어’는 그 자체로 독자적인 언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어가 보다 적합하다는 결과가 있었다.

○ ‘수화’가 적합함

기존의 일반인들 사이에서 ‘수어’는 생소한 반면, ‘수화’가 널리 통용되어 있고, 또 수화라는 단어 한문자체에 언어라는 의미가 있고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수화를 언어라고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과가 있었다. 그리고 수어로 바꾸게 되면, 기존의 수화를 사용해왔던 다양한 법 및 정책들이 다 개정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 ‘수화언어’가 적합함

언어라는 의미에서 수어가 보다 정확하지만, 보편적으로 수화가 사용되기 때문에 수화와 수어를 적절히 중재해서 수화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더불어 수화언어를 약칭으로 수어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해야 함

‘수화’나 ‘수어’나 어떤 단어로 사용할 것인지를 정할 때, 농인 당사자들이 원하는 단어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결과가 나왔다.

2.3.3. ‘농인’ 용어의 재정립

○ ‘농아인’이 적합함

청각장애인도 언어장애인도 수화를 배울 수 있게 함으로써 수화를 보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아인이 적합하며, 청각장애가 있으면 음성언어 구사능력에 제한이 생기므로 농아인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농인’이 적합함

농인은 수화라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장애인이 아니고, 음성언어도 구사할 수 있는 농인도 있기 때문에 농아인은 적합하지 않고 농인이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난청인의 경우 자신을 농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농인이 적합한 개념인지에 대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청각장애인’이 적합함

국제적으로 법적인 용어로 청각장애인이 사용되고 있으며, 기존의 국내법에서도 청각장애인으로 사용하여 보편적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게다가 농인은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만 포함되어 있고, 구화인, 난청인, 중도실청인 등 다양한 청각장애인들을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으로 넓게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가 나왔다.

○ 새로운 용어정립이 필요

농인에는 이미 병리학적 개념이 있어서 사회문화적 관점의 단어로 사용하는 것은 모순이며, 많은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사람, 수화사용자(생활자)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 제1언어의 정의가 모호함

농인은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정의를 내리면, 실제로 농인 중에 음성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수화를 접하게 되는 사람들, 수화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난청인들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1언어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2.3.4. 농문화의 정의와 지원의 필요성

○ 농문화의 중심은 수화임

농문화가 있는 곳에는 항상 수화가 있으며, 농인은 시각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므로 자연스럽게 청각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청인과 다른 농문화가 생성되며, 농문화는 고유문화로 다른 문화와 대등한 존재를 나타낸다는 결과가 나왔다.

○ 농문화의 정의 재정립 필요

농문화가 청인의 문화와 어떻게 다른지 정의가 필요하며,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안에 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 농문화 지원이 필요함

농인은 눈으로 보는 농문화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농문화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며, 농문화 지원은 농인의 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2.3.5. 수화기본법을 담당할 주무부서 선호도

○ 문화체육관광부가 적당함

수화와 농문화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된 것이므로 두 가지를 모두 전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라는 의견이 나왔다.

○ 타 부서가 적합함

수화언어의 교육 및 보급에 관련해서는 교육부, 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려면 보건복지부, 수화의 개발 및 보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무부서가 되어야 한다는 등 여러 부서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다양한 부처에서 분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부서가 되고 법무부 및 타 부처가 보조를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특정부서만이 아니라 총리실 산하를 비롯한 모든 부처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맞게 수화언어법을 지원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좋다는 결과가 나왔다.

○ 법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함.

전담 부처는 수화언어법의 성격 및 목적에 따라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제정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결과가 나왔다.

2.3.6. 법안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논의

○ 수화 교육

수화교원제도를 만들어서 수화언어의 교육과 보급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고, 농학교에서는 수화를 의무로, 일반학교에서는 수화를 선택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화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체계적으로 구성되면 좋겠다는 결과가 있었다.

○ 음성언어(한국어)와 수화를 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수화만으로 사회참여에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어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중문화, 이중언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구화 및 음성언어에 대한 욕구가 현장에 계속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기보다 수화와 함께 균형 잡힌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농문화연구소 및 수화연구소 설립

농인의 삶 및 문화에 대해 연구하는 농문화연구소의 설립이 필요하며, 수화를 언어학적으로 연구하는 수화연구소가 필요하며, 수화언어정책을 평가하는 정책연구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문자통역/속기 서비스 지원 필요

수화통역을 지원한다고 해서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자통역 및 속기지원을 추가하여 농인이 모든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고 사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 수화통역 서비스받을 권리 명시 및 지원 필요

농인이 음성언어 중심 사회에서 수화통역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수화통역 서비스를 당당히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수화의 언어권 침해 방지 장치 마련

언어로서의 수화를 사용할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농인 자녀를 둔 부모가 그들의 자녀가 수화를 사용하면서 올바른 정체성을 갖도록 부모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농인이 가족 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가족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수화의 보편적 사용 환경 조성

수화를 농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수화를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2.3.7. 법의 방향

○ 한국수어의 제대로 된 사용문화 장려

수화언어법을 통해 한국수화를 언어답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 농인 당사자의 관점이 반영

수화언어법을 통해 청인관점에서의 농인 및 수화연구가 아니라 농인 당사자 및 농인 관점에 의한 농인 및 수화연구가 나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다양한 의사소통 지원으로 접근

수화언어법이 수화의 언어적 권리 보장과 더불어 의사소통의 제한이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 기존법과의 중복을 피하고 누락된 부분을 보완

수화언어법이 기존의 장애 관련 법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기존의 법들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로 제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2.3.8. 법의 적용 대상자

○ 수화를 사용하는 청인도 포함

청각장애가 없는 비장애인이지만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도 수화언어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난청인 및 청각장애인도 포함

난청인 및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은 나중에 수화를 배우는 경우 및 잠재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난청인 및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도 수화언어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 언어장애인 포함

수화언어법이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언어장애인도 포함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 모든 국민도 포함

수화언어법이 단순히 수화만 사용하는 농인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수화를 쉽게 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과가 나왔다.

2.3.9. 법률명에 대한 논의

○ 한국수화법

수화언어법이라고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외국법에서는 그 국가 이름을 붙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국수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 쉬운 언어로 제정 필요

법 명칭은 농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익숙할 수 있는 단어로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 수화를 둘러싼 다양한 지원 포괄의 개념으로 명칭정의

수화언어법에 대한 명칭은 수화언어법 및 추가적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여 수화의 언어적 권리보장만이 아닌 다양한 의사소통 및 교육 등 여러 지원들이 포함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V. 가칭 한국수화법 입법안

1. 입법배경

1.1. 농인의 언어권 보장

인간은 누구에게나 언어권이 있다. 농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언어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언어는 인간의 삶의 방식에서 볼 때 인간의 본질과 닿아 있는 인간 구성의 근본적인 요소이다.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인간을 상정하기 어려운 것을 보면 인간에게 있어 언어는 인간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언어를 이해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권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농인에게 있어 언어는 수어이다. 농인에게 수어는 인간의 인격을 형성하는 요소이면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즉 언어권은 생명권과 함께 자연권의 가장 기본적 권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농인에게 있어 평등한 삶,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은 그들의 모어인 수어를 쓰면서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가는 국민이 이런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즉 국민의 언어권을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참조). 따라서 ‘한국수어법’ 제정은 농인의 언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첫걸음이라 할 것이다.

1.2. 농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

농인의 수어사용은 그들의 농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공용어인 수어사용을 통하여 농정체성을 유지하며, 사회·문화생활을 영위한다. 따라서 수어사용에 대한 언어권 보장은 궁극적으로는 농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조건이라 할 것이다. 언어권 또는 언어 인권은 사회적 소수자의 언어를 보호하고 육성함으로써 그들의 인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낸 문화를 보존하여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최근에는 다른 정치적 권리와 함께 그 외연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언어권은 인간이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표현을 할 권리를 광범

위하게 상정한 것으로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 구체화할 수 있는 권리이면서 동시에 언어권을 인권의 개념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언어로 인해서 인권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 행복추구의 기본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가 되어 있다.

2. 법률안의 제정 이유

법률안의 제정이유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농인은 음성언어인 한국어를 대신하여 한국수어(Korean Sign Language)를 제1언어로 사용하여 왔으나, 우리 사회의 수어사용 환경이 미비하여 한국수어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정보이용·학습 등에 많은 제약이 있음.
- 이러한 결과는 농인으로 하여금 교육, 취업 및 일상생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겪게 되고 사회적 소외계층이 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현행법상으로는 「국어기본법」에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인의 경우에는 국어와 다른 형식의 언어인 시각·동작체계의 수어(sign language)를 제1언어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수어를 법제도화하여 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수어(수화)통역을 제공하는 규정들이 있어 의사소통수단을 지원하는 근거로서는 의미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수어를 공용어로 선언하고, 한국수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권리를 인정하여야 할 것임.
-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어(signed languages)는 음성언어와는 다른 언어형식을 지니는 수어의 개별성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따라서 농인들의 교육권, 사회권 등 인권은 제1언어 또는 모어로서 언어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전제로 함. 또한 국제적으로는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어를 법률로 공인하거나 공용어로 인정하는 나라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자격의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한국수어의 보급·발전과 농인의 교육·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의 참여를 증진하려는 것임.

3. 법률안의 구성과 주요내용

3.1. 법률안의 구성

○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며, 본문은 총 4장 21조로 구성

제1장 총칙 : 제1조~제7조

제1조(목적), 제2조(공용어), 제3조(정의), 제4조(기본이념 및 원칙), 제5조(법의 해석 및 적용), 제6조(공공기관등의 책무),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본계획 등 : 제8조~제11조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보고), 제11조(실태조사)

제3장 한국수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 제12조~제19조

제12조(한국수어의 연구 및 교육 등), 제13조(한국수어심의회), 제14조(교육과 한국수어), 제15조(한국수어의 사용 및 촉진), 제16조(한국수어의 보급), 제17조(수어통역), 제18조(한국수어의 날), 제19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4장 보칙 : 제20조~제21조

제20조(협의),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부칙

3.2. 법률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인이 일상생활의 언어로 사용하는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언어임을 선언하고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의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언어권을 신장하고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국수어’란 한국 농인의 공용어이며, 한국 농인의 사회·문화 속에서 시각·동작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한국어와 다른 고유한 형식의 언어로 정의함(안 제2조 및 제3조제1호).

- 다. 한국수어는 농인의 제1언어이므로 농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모든 정책 수립에 반영되어야 하고, 농인은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 라. 농인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 권리가 모든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안 제4조제4항), 농인등은 다양한 대체 의사소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됨(안 제4조제5항).
-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중장기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한국수어연구소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12조제1항).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한국수어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 아. 한국수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과 그 발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수어심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에서의 한국수어에 의한 교육을 지원·촉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농인 교사 또는 한국수어를 사용하여 교육이 가능한 교사를 배치하여야 함(안 제14조제1항).
-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학습언어로 사용하며 한국수어를 교육과정에 포함하여야 함(안 제14조제2항).
- 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를 배우고자 하는 국민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며, 한국수어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농인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고, 교육기관, 사업장 등에서도 수어통역 지원을 보장하여야 함(안 제17조).
-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4. 입법이유서

4.1. 법률안의 구성체계

□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며, 본문은 총 4장 21조로 구성

제1장 총칙 : 제1조~제7조

제1조(목적), 제2조(공용어), 제3조(정의), 제4조(기본이념 및 원칙), 제5조(법의 해석 및 적용), 제6조(공공기관등의 책무),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본계획 등 : 제8조~제11조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보고), 제11조(실태조사)

제3장 한국수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 제12조~제19조

제12조(한국수어의 연구 및 교육 등), 제13조(한국수어심의회), 제14조(교육과 한국수어), 제15조(한국수어의 사용 및 촉진), 제16조(한국수어의 보급), 제17조(수어통역), 제18조(한국수어의 날), 제19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4장 보칙 : 제20조~제21조

제20조(협의),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부칙

4.2. 법률안의 주요 특징

□ 농인의 언어권 보장에 관한 기본이념 및 원칙 천명

- 기본이념 및 원칙 조항을 명시하여 농인의 기본권 보장과 한국수어법의 실천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농인이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 농인의 언어 선택권 보장은 물론 농사회·문화 및 농정체성 인정

- 한국수어의 언어적 지위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를 근간으로 형성된 농사회·문화 및 농정체성을 인정함으로써 농인들의 언어권 보장은 물론이고, 그들의 사회·문화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 법률명 및 용어 차별화를 통한 언어로서 수어 인식 제고 : ‘한국수어법’

- 농인 등 수화 사용자들의 의견 수렴(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언어로서의 수화’의 명칭을 ‘한국수어’로 정함으로써 ‘수화’를 한낱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여겼던 기존의 인식을 바로잡아 고유한 언어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함.

□ 법률 적용 대상자의 구체화 : 농인을 포함한 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등

-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언어적 주체로서 ‘농인’을 정의함.
- 언어권 보장의 1차적 수혜대상자는 농인으로 규정하고, 더 나아가 2차적 수혜대상자로서 청각 및 언어 장애인까지 확대함.

□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으로 수어에 대한 체계적인 언어정책 기반 마련

- 한국수어 실태조사를 규정함으로써 수어의 현실에 대한 기초 연구를 토대로 한 수어에 대한 체계적인 언어정책 기반 마련

□ 농인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규정 마련

- 한국수어교육원 설치, 농인교사 및 한국수어사용 가능 교사 양성, 교사 및 학부모 수어사용능력 신장 지원, 교육용 교재제작 및 보급 등

4.3. 조문별 입법이유 및 해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인이 일상생활의 언어로 사용하는 한국수어가 음성언어인 국어기본법 제3조제1호의 국어와 다른 형식의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인정하고,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의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률의 목적조항으로서 한국수어법의 제정 기본이념을 밝힘. 첫째, 한국수어가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인정하고 둘째, 농인의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언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인 농인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확보를 목표로 함.(헌법 제10조)

제2조(공용어)

제2조(공용어) ① 한국수어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농인의 언어 선택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공용어(公用語, official language)는 한 국가나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법적 지위를 얻은 언어를 말함. 공용어를 정하는 것은 각 나라의 상황에 따른 언어정책적 판단 문제임. 우리나라는 「국어기본법」에서 음성언어인 한국어를 공용어로 정함. 따라서 우리나라 농인은 그들의 제1언어이자 모어인 수어를 공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외국어나 다른없는 음성언어인 한국어만을 공용어로 강요당하고 있으므로, 농인의 모어인 수어를 공용어로 선언하여 법적 보장을 해

주어야 함.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소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마땅함.

- ☐ 한국수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인은 국어 또는 수어 중 본인이 사용할 언어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함. 따라서 농인이라 할지라도 구화 등에 의한 언어 소통을 인정함.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사회·문화 속에서 시각·동작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국어와 다른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유사수어체계”란 의사소통의 한 수단으로 국어 문법형식에 한국수어 단어를 대응시킨 인위적인 체계를 말한다.
3.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사회·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생활의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사회·문화란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및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한국수어를 일상생활의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이 농사회·문화 속에서 가지는 일체감 또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농인이 사용하는 한국수어를 음성언어인 국어로 변환하거나 음성언어인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 우리나라에서 ‘수화(手話)’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온 일반화된 용어임. 그러나 이 법이 ‘언어권’ 보장에 관한 것인 점, ‘수화’보다는 ‘수어’ 용어가 언어 의미를 더 강하게 내포한다는 점, 현재의 사회성·대중성보다는 미래의 바람직한 용어 사용을 법정 용어로 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수어’를 향후 농인의 공용어를 지칭하는 용어로 채택하게 되었음.

- (1차 조사) (때) '13.5. (방법) 인터넷 설문 (대상 규모) 응답자 299명 중 농인 131명, 청인 168명 (결과) 수화 41%, **수어 59%** 선호도
- (2차 조사) (때) '13.7. (방법) 서면 및 면대면 설문 (대상규모) 전국 시도 농아인협회 및 지부의 농인 중 1,423명 응답 (결과) 수화 48%, **수어 52%** 선호도

- ☐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사회·문화 속에서 시각·동작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국어와 다른 고유한 형식의 자연어(自然語)임. 이는 한국수어가 음성언어인 국어를 대체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언어체계를 가지고 있는 농인의 고유한 언어라는 점을 말함.

□ 유사수어체계는 ‘의사소통의 한 수단으로 국어 문법형식에 한국수어 단어를 대응시킨 인위적인 체계(인공어 : 人工語)임. 아직 법적으로 언어로서의 수어와 수어를 기반으로 하는 농사회·문화의 기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의 농인과 청인이 수어 단어를 국어 형식에 대입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 법률안은 그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유사언어형식으로서 유사수어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어 언어권의 1차적 주체는 ‘청각장애인’이 아닌 ‘농인’임. 이 법률안에서 명시하였듯이 ‘농인’은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이며, 수어 언어권의 주체임. 농인은 수어를 기반으로 농사회·농문화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으며,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청각장애인’은 인간의 5감 중에서 하나의 감각 즉 청각을 뺀 4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며, 이는 다분히 의학적인 판단 기준에 의존하는 병리적인 차원의 정의로서, 언어와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이 법안에서 정의하는 ‘농인’은 ‘농인은 장애인이다.’라는 명제가 아니라 ‘청각에 장애가 있으며,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체이다.’라는 명제를 바탕으로 함.

□ ‘언어장애인 등’으로 수어 언어권 주체를 확대해야 하는가?

○ 발음기관의 이상으로 음성언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언어장애인이 수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며, 이때는 언어장애인으로서가 아니라 이 법안 제4조 제5항의 ‘농인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언어장애인도 수어 사용의 2차적 주체로 볼 수 있음.

□ “농사회·문화”와 “농정체성”은 농인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개념 요소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농사회·문화”는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및 생활양식의 총칭이며, “농정체성”이란 농사회·문화 속에서 가지는 농인의 일체감 또는 자기동일성을 말함.

제4조(기본이념 및 원칙)

제4조(기본이념 및 원칙) ①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 공동체를 기반으로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한국수어는 농인의 제1언어이므로 농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모든 정책 수립에 반영되어야 한다.

③ 농인은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이하 “모든 생활 영역”이라 한다)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농인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 권리가 모든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농인을 포함한 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등(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은 한국수어 및 유사수어체계 등(이하 “한국수어등”이라 한다) 다양한 의사소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 제4조의 기본이념 및 원칙

- 국가와 국민의 한국수어 및 농문화의 계승·발전 협력 의무 (제1항)
- 국가 정책에 한국수어 반영 의무 (제2항)
- 한국수어 사용에 따른 차별금지 및 수어로 정보제공 받을 권리 (제3항)
- 수어로 교육받을 권리 및 국가의 노력의무 (제4항)
- 농인등의 의사소통수단 선택권 보장 (제5항)

제5조(법의 해석 및 적용)

제5조(법의 해석 및 적용) 국가는 이 법의 규정이 「장애인권리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의 내용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 법률과 국제법의 관계

- 유엔이 제정한「장애인권리협약」은 국제인권조약으로서 우리나라도 비준하여 2009년 1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적용되고 있음.
- 「장애인권리협약」은 국제문서로서는 처음으로 수어를 언급하여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제9조, 제21조, 제24조, 제30조 등), 특히 제2조는 수어를 언어의 하나로 규정함.
- 우리나라가 비준한 조약 등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헌법 제6조제1항), 법률안 제5조는 국제법인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이 국내법에도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음.

제6조(공공기관등의 책무)

제6조(공공기관등의 책무) ① 공공기관등은 한국수어의 진흥을 위한 지원·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및 촉진·발전을 위한 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등의 책무

- 한국수어의 진흥을 위한 지원·홍보 노력의무
-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및 촉진·발전을 위한 환경 개선 노력의무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수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 규정은 국내법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서 수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이 법을 적용함을 규정함.

- 「한국수어법」이 수어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대하여 「한국수어법」 제정 이후 다른 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하게 된다면 그 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과 협력하여야 하고, 제13조에 따른 한국수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모든 생활 영역에서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의 통역과 한국수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남북한 수어의 교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의 발전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한국수어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한국수어의 진흥에 관한 사항

□ 한국수어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의무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계 국가기관과 협력하여야 함.
- 기본계획 수립은 한국수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기본계획의 내용

-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을 위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정책을 제시
-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 : 수어 사용의 저해 환경과 개선 방안 제시
- 한국수어의 정보화 :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수어의 정보화 현황과 동향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장기 계획 제시
- 한국수어의 통역과 한국수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 수어통역서비스의 확대, 수어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제시
- 남북한 수어의 교류 및 연구 : 남북한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한 수어 비교 연구 및 협력 방안 제시
- 한국수어의 발전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 : 수어 정책 발전을 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자원 조달과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 한국수어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 「한국수어법」 제정으로 인한 관련 법령의 재정비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법령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는 제8조 기본계획의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규정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란보다 관련 기관 간에 상호 협력 노력을 할 것을 규정한 것임.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정부는 2년마다 한국수어의 진흥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당해 연도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수어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제출할 것을 의무화함.(국어기본법상 어문정책 보고서 제출기간과 동일함)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한국수어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수집이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한국수어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한국수어 실태조사 필요성

- 수어도 언어이므로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함.
- 현재 장애인실태조사가 3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와 기간을 동일하게 함.

제12조(한국수어의 연구 및 교육 등)

제12조(한국수어의 연구 및 교육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한국수어연구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한국수어연구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수어 관련 법인·단체에게 한국수어교육원을 위탁 또는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된 한국수어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 또는 지정된 한국수어교육원이 그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의 위탁 또는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수어연구소 설치

- 언어로서의 수어에 대한 체계적인 언어학적·학문적 연구와 수어교육 및 수어를 사용한 교육과 관련한 공식 기관의 설립은 한국수어와 농교육의 현실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음.
- 이 법률안에서 수어연구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해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한국수어연구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한국수어연구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 한국수어교육원 설치

- 한국수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수어 관련 법인·단체가 한국수어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수어교육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또는 지정받아 설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교육기관 설치를 방지함.
- 수어연구소는 행정기관의 하나로서 중앙부서의 부설로 직접 설치·운영하여야 하나, 수어교육원은 교육기관으로서 지역별로 설치할 필요가 있어 이는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지정하도록 함.

제13조(한국수어심의회)

제13조(한국수어심의회) ① 한국수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과 그 발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수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회를 설치하는 때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기능 및 성격,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운영방법, 설치방법·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심의자문위원회로서의 한국수어심의회 설치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나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 설치
- 한국수어의 발전계획 및 촉진·보급에 관한 사항은 수어에 관련된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언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성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회를 설치하는 때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심의회의 기능 및 성격,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운영방법, 설치방법·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한국수어심의회는 국어와 다른 언어에 관한 정책을 다루므로 별도의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야 함.

- 위원의 구성 내용이 달라짐(농인 당사자 및 전문가 등 참여 필요)

제14조(교육과 한국수어)

제14조(교육과 한국수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에서의 한국수어에 의한 교육을 지원·촉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농인 교사 또는 한국수어를 사용하여 교육이 가능한 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그 배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학습언어로 사용하고 한국수어를 교육과정에 포함하여야 하며, 그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한국수어 및 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에 의한 학습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이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를 제작 및 보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사와 학부모의 한국수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위 제1항부터 제6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농학교 교육에서 국어와 수어의 상호관계(이중언어교육 관련)

- 농인에게 있어서 언어교육은 ① 수어를 습득할 수 있는 언어적 환경, ② 수어를 배우고 수어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③ 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음성언어의 문자를 배워 익혀 농인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함.
- 농인의 삶의 현장은 그들만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만이 아니라, 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통합사회임. 즉 청인과 다른 언어를(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지만, 청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음성언어의 문자를 배워 사용하는 것은 농인의 삶을 훨씬 수월하고 풍부하게 함.
- 그러나 법률에서는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큰 틀에서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법 및 사항들은 하위규범이나 관련부처에 위임하는 것이 보다 더 실효성이 있음.

□ 수어를 교수·학습언어로 사용하는 데 대한 농학부모들의 의식

- 일련의 연구에 따르면, 청각장애학교 교사들의 농문화에 대한 인식은 병리론에 기초하여 정형화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특수교육학과 국제학술대회, 2005)되고 있어, 학부모들의 의식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

- 또 인공와우 수술의 확산, 청인 중심의 주류사회문화의 영향 등이 농인부모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향후 농사회와 농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농정체성 이해에 대한 계몽이 함께 이루어져야 농인의 교육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이 법안은 그러한 사회적 환경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수어교육 관련 업무 - 부처 간 업무 협력

- 수어교육은 크게 수어를 교육하는 것과 수어로 배우는 것을 포함함.
- 교육은 언어를 기반으로 이루어짐. 언어적 지위를 공인하는 한국수어에 대한 법 제정의 현실에서, 언어법안에 교육에 관한 방향제시와 기본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교육부의 협조로 실현해 나가야 함.

□ 농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한국수어에 의한 교육을 지원·촉진
- 농인 교사 또는 한국수어 사용 교육이 가능한 교사를 배치
-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학습언어로 사용
- 한국수어를 교육과정에 포함
- 농인들의 한국수어 및 국어 능력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한국수어에 의한 학습 지원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 제작 및 보급
- 교사와 학부모의 한국수어 사용 능력 향상 지원

제15조(한국수어의 사용 및 촉진)

- 제15조(한국수어의 사용 및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수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간 대중매체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에 의한 문화·예술 활동 및 각종 체육활동을 장려·지원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책임과 의무

-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

- 한국수어 사용 촉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간 대중매체의 참여 유도
- 한국수어에 의한 문화·예술 활동 및 각종 체육활동을 장려·지원
- 한국수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 시행

제16조(한국수어의 보급)

제16조(한국수어의 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급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한국수어의 보급 사업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급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 한국 수어교원 양성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 시행
- ☐ 한국수어능력 검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음.
- ☐ 한국수어 보급 사업 및 수어능력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17조(수어통역)

제17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농인등은 수어통역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농인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교육,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에서 농인에게 수어통역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에서 농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수어통역 지원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수어통역을 지원할 때에 농인의 요청이 있고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어체계, 실시간 문자통역 및 속기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⑥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 인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에 대하여 한국수어 등의 의사소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어통역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농인등의 권리를 규정함.
 - 제17조제1항은 제2조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한 규범이라 할 수 있음.
 - 국가가 농인등의 언어권을 포함한 인권과 그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고 법적으로 보장
- 수어통역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영방송 및 공공행사 등에서의 수어통역 지원을 명시(제2항)
 -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방송 프로그램의 수화·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 방영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농인등의 언어적 기본권과 정보접근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제3항에서 수어통역이 지원되는 행사를 대통령령으로 국경일 등에 한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의 수어통역 지원규정을 명시하여 농인등의 교육현장에서의 장애로 인한 차별적 상황을 방지하고 교육권 보장에 이바지토록 함(제3항)
- 제4항은 농인의 직업현장에서의 수어통역지원에 대한 규정으로 현실적으로 수어통역이 필요한 직무환경인가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력 조항으로 함.

□ 농인들의 수어통역 외의 정보전달 및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으로 유사수어체계와 실시간 문자통역 및 속기 등을 동시에 제공할 필요에 대한 규정으로, 이는 한국수어의 공용어 선언의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음성언어인 국어문법에 단어를 나열하는 유사수어체계나 이중언어 사용이 가능하거나 수어보다는 문자로 정보를 전달받는 것에 익숙한 농인들을 고려한 규정(제5항)

□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 인증

○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 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항)

○ 수어통역센터의 설치·운영은 그 목적이 ‘의사소통수단 제공 서비스 지원’이며,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는 수화통역센터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하나라는 점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규정한 것이며, 그 설립주체 또는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국가기관)로 유지함에 특별한 문제는 없음.

제18조(한국수어의 날)

제18조(한국수어의 날) 정부는 한국수어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한국수어의 날을 정하여 기념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촉진을 위한 가시적 노력이 필요함.

□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해야 하는 법 수혜자 뿐 아니라, 음성언어인 국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국민들의 수어언어에 대한 인식제고 및 의식고취를 위한 국가 차원의 한국수어의 날을 정하여 기념하기 위한 규정

제19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9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사용의 촉진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한국수어사용의 촉진 및 보급을 위한 재정 지원 규정임

- 한국수어의 발전과 사용촉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단체의 창발적인 활동이 필요함.
- 이러한 활동들이 한국수어의 보급 및 발전에 기여하므로, 이러한 노력들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제20조(협약)

제20조(협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수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한국수어 관련 내용이 포함된 법률의 제·개정 시 「한국수어법」과 충돌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과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 제21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어정책을 시행할 때 그 권한과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효과성 등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임.

VI.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1. 시행령안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하위규범에 해당하는 명령이다. 한국수어법안에서 명시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으로는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항 및 제5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제16조제3항, 제17조 제3항, 제6항 및 제7항, 제18조, 제21조 등이다. 이에 관하여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1.1. 실태조사의 세부사항

법률안 제11조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한국수어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즉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할 사항들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실태조사의 대상 사항

- 국민의 한국수어 능력에 관한 사항
- 국민의 한국수어 의식에 관한 사항
- 한국수어 사용 환경에 관한 다음의 사항
 - i) 국민의 한국수어 사용 등의 실태
 - ii) 국민의 한국수어를 통한 경어·외래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등의 사용 실태
 - iii) 신문·방송·잡지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한국수어 사용 실태
 - iv) 영화·광고 등의 한국수어 사용 실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실태 조사 업무의 일부를 수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2. 한국수어연구소 및 한국수어교육원

1.2.1. 한국수어연구소

법률안 제12조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한국수어연구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연구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수어연구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속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4조 참조)

<정부조직법 제4조>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장 국립국어원 제36조~제41조

한국수어법시행령안에서는 법률안 제12조제1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명시를 하되, 다만 구체적인 조직과 직무범위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정부조직법」과 조화를 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규정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시행령안의 조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제0조(한국수어연구소의 설치·운영)

① 법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연구소는 「정부조직법」 제4조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속기관으로 본다.

② 한국수어연구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1.2.2. 한국수어교육원

법률안 제12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수어 관련 법인·단체에게 한국수어교육원을 위탁 또는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조제5항에서 이에 따른 위탁 또는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수어교육원을 위탁·지정받으려는 기관의 자격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시행령규정안을 예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예시)

제0조(한국수어교육원의 위탁·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위탁 또는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을 갖추는 것

가. 상근 책임자 1명: 한국수어 관련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의 수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상담소, 수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5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나. 상근 교육 강사 2명 이상: 한국수어 관련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대학의 수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상담소, 수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3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2. 강의실, 상담실 및 행정실 등의 시설을 갖추는 것

②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서식의 한국수어교육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자치구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수어교육원 운영계획서

2.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을 적은 서류

③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전년도 교육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 한국수어심의회

법률안 제13조는 한국수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과 그 발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수어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회를 설치하는 때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심의회의 기능 및 성격,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운영방법, 설치방법·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정하고 적절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합의 및 협의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수어심의회는 국어와 다른 언어에 관한 정책을 다루므로 국어심의회와는 별도의 위원회로서 자문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농인 당사자 및 전문가 등 참여가 필요하므로 위원의 구성 내용이 국어심의회와는 구별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시행령규정안을 예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예시)

제0조(한국수어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
2. 한국수어연구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과 그 발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수어심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어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농인을 포함하여 수어학, 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농인 위원의 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어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⑧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⑨ 심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그 밖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1.4. 교육과 한국수어

법률안 제14조는 농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면서, 농학교에서의 농인 교사 또는 한국수어 사용 교육이 가능한 교사의 배치 기준과 방법, 교육과정 적용기준, 한국수어에 의한 학습 지원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 제작 및 보급, 교사와 학부모의 한국수어 사용 능력 향상 지원 등 이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한국수어법」 제14조를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14조제7항). 따라서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할 때에도 구체적인 교육정책은 소관부서인 교육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예시)

제0조(교육과 한국수어)

법 제14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농학교에서의 교사 배치 기준과

방법, 농학교 교육과정의 적용기준, 농학교 교과용 도서의 제작 및 보급 등 농학교 교육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특수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5. 한국수어교원 양성 등

1.5.1. 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

법률안 제16조제3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양성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을 예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예시)

제0조(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인을 대상으로 수어를 가르치는 사람(이하 "한국수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교원 1급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 시간 이상 한국수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수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2. 한국수어교원 2급

가. 한국수어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수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1천2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3. 한국수어교원 3급

가. 한국수어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수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2. 수어통역기관 및 수어 관련 단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을 받아서 발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5.2. 한국수어능력검정

법률안 제16조제3항에 따라 한국수어능력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수어능력 검정에 관한 규정을 예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예시)

제0조(한국수어능력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적인 한국수어 사용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1.6. 수어통역 등

1.6.1. 수어통역 보장 교육기관의 범위

법률안 제17조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교육,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에서 농인에게 수어통역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면서, 그 교육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교육기관의 범위를 예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예시)

제0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6.2. 수어통역 전문 인력 양성

법률안 제17조제6항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자격인증에 관하여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71조제1항과 동법시행규칙 제55조는 수화통역사를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농아인협회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의해 수화통역사 자격제도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으로 하여 검정시험과 자격증 발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행제도를 존중하여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자격인증에 관하여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그럴 경우 전문 인력 자격에 관한 주무부장관은 현재로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이는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현행제도를 존중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규정을 예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예시)

제0조(수어통역 전문 인력 양성 등)

① 「장애인복지법」 제71조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55조에 의한 수화통역사는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으로 본다.

②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자격인증에 관하여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의해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에 따른다.

1.6.3. 수어통역센터

법률안 제17조제7항은 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수어통역센터에 관한 현행법 규정으로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하나로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 현행법상으로는 수어통역센터의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가 된다. 입법정책상으로는 수어통역을 새롭게 언어 관련 정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복지서비스정책으로 볼 것인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새롭게 「한국수어법」을 제정하는 입장에서 과도기적으로는 기존 정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행제도를 존중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규정을 예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예시)

제0조(수어통역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와 [별표4]에 의하여 설치하는 수어통역센터는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수어통역센터로 보며, 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법」규정에 따른다.

1.7. 한국수어의 날

법률안 제18조는 정부는 한국수어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한국수어의 날을 정하여 기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였다. 이에 관하여 시행령 규정을 예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예시)

제0조(한국수어의 날 기념)

① 정부는 법 제18조에 따라 수어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한국수어의 날을 정하여 매년 기념할 수 있다.

② 한국수어의 날을 정하여 기념하는 경우에 정부는 기념행사를 할 때에 한국수어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를 한국수어발전유공자로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은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8. 권한의 위임·위탁

법률안 제21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과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과 업무의 일부를 위임하도록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정책 시행의 유연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 시행령안 정리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세부사항 등)

① 「한국수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국민의 한국수어 능력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한국수어 의식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 사용 환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의 한국수어 사용 등의 실태

나. 국민의 한국수어를 통한 경어·외래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등의 사용 실태

다. 신문·방송·잡지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한국수어 사용 실태

라. 영화·광고 등의 한국수어 사용 실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실태 조사 업무의 일부를 수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한국수어연구소의 설치·운영)

① 법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연구소는 「정부조직법」 제4조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속기관으로 본다.

② 한국수어연구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제4조(한국수어교육원의 위탁·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위탁 또는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을 갖추는 것

가. 상근 책임자 1명: 한국수어 관련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거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의 수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상담소, 수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5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나. 상근 교육 강사 2명 이상: 한국수어 관련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대학의 수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상담소, 수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3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2. 강의실, 상담실 및 행정실 등의 시설을 갖추는 것

②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서식의 한국수어교육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자치구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수어교육원 운영계획서

2.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을 적은 서류

③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전년도 교육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한국수어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
2. 한국수어연구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수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과 그 발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수어심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어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농인을 포함하여 수어학, 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농인 위원의 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어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한다.

⑧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⑨ 심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그밖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교육과 한국수어)

법 제14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농학교에서의 교사 배치 기준과 방법, 농학교 교육과정의 적용기준, 농학교 교과용 도서의 제작 및 보급 등 농학교 교육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특수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인을 대상으로 수어를 가르치는 사람(이하 "한국수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교원 1급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 시간 이상 한국수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수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2. 한국수어교원 2급

가. 한국수어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수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1천200 시간 이상의 한국수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3. 한국수어교원 3급

가. 한국수어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수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2. 수어통역기관 및 수어 관련 단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을 받아서 발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한국수어능력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적인 한국수어 사용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0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 등)

① 「장애인복지법」 제71조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55조에 의한 수화통역사는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으로 본다.

②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자격인증에 관하여는 「자격기본

법」 제19조에 의해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에 따른다.

제11조(수어통역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와 [별표4]에 의하여 설치하는 수화통역센터는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수어통역센터로 보며, 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한국수어의 날 기념)

① 정부는 법 제18조에 따라 수어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한국수어의 날을 정하여 매년 기념할 수 있다.

② 한국수어의 날을 정하여 기념하는 경우에 정부는 기념행사를 할 때에 한국수어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를 한국수어발전유공자로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은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시행규칙안

시행규칙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과 시행령의 하위규범에 해당하는 명령이다. 따라서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지만 시행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라는 점에서 제정주체가 다르다. 한국수어법안에서는 명시적으로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시행령안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들이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시행규칙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1. 한국수어심의회 의 농인 위원 비율

시행령안 제5조제4항에서는 한국수어심의회 의 농인 위원의 비율을 시행규칙인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수어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인 당사자의 참여 보장이라는 점에서 농인 위원의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행규칙 규정을 예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예시)

제0조(한국수어심의회 의 농인 위원 비율)

「한국수어법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한국수어심의회 의 농인 위원의 비율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2. 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 등

시행령안 제7조는 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면서, 일부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2.1. 한국수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시행령안 제7조제3항에서는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규정을 예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예시)

제0조(한국수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 위원은 한국수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2.2. 한국수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등

시행령안 제7조제5항에서는 한국수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규정을 예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예시)

제0조(한국수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등)

①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별지 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와 한국수어교육 경력증명서는 각각의 별지 서식에 따른다.

1.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수어교육 경력증명서

2. 영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3. 영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4. 영 제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5. 영 제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한국수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②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3. 한국수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등

시행령안 제7조제6항에서는 한국수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규정을 예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예시)

제0조(한국수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및 공고)

① 영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자격의 심사는 연 2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수어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자격의 심사를 시행

하기 3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한국수어교원 자격의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3. 교육기관의 범위 지정

시행령안 제9조에서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을 규정하면서 예시한 기관 외에 추가로 시행규칙에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규정을 예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예시)

제0조(교육기관의 범위)

영 제9조에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4.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 시행규칙안 정리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수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수어심의회 의 농인 위원 비율)

「한국수어법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한국수어심의회 의 농인 위원의 비율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조(한국수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 위원은 한국수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한국수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등)

①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별지 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와 한국수어교육 경력증명서는 각각의 별지 서식에 따른다.

1.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수어교육 경력증명서

2. 영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3. 영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4. 영 제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5. 영 제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한국수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②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한국수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및 공고)

① 영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자격의 심사는 연 2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수어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자격의 심사를 시행하기 3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한국수어교원 자격의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기관의 범위)

영 제9조에서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4.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VII. 결론 및 제언

1. 수어의 법적 지위 보장

본 연구는 「한국수어법」을 제정함으로써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음성언어인 국어와 동등하게 법적으로 그 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최근 20여 년 동안 수어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수어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인의 언어권 보장을 회복시킴으로써 농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6년에는 장애인의 국제적인 권리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제정되고, 이 국제 인권조약에서는 수어를 언어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12월엔 이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2009년 1월 10일부터는 효력이 발생하여 적용되고 있다. 한편 국내법의 실정을 볼 때,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농인 등에 대한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 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언어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고 할 것이다. 「한국수어법」 제정은 농인에게 기본적인 언어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기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한국수어법안」의 주요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수어를 농인의 공용어로 규정하였다는 점이다(법안 제2조제1항). 공용어는 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법적 지위를 얻은 언어를 의미하므로 농인의 공용어로서 한국수어 인정은 농인의 언어권 보장 선언에 해당한다고 본다.

둘째, 법률 적용 대상자를 구체화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이 아닌 언어적 주체로서 농인을 정의하였다(법안 제3조제3호). 이 법안에서는 농인을 단순히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닌 농사회·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생활의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 법률 적용의 1차적 수혜대상자는 농인이고, 더 나아가 2차적 수혜대상자로서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까지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농인의 언어권 보장을 바탕으로 하여 농사회·문화가 인정되고 발전하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농인은 수어를 근간으로 형성된 고유

한 농사회·문화 및 농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법제도적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보다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농인의 언어권 보장에 관한 기본이념 및 원칙을 천명하였다(법안 제4조). 여기서는 농인의 언어기본권 보장과 한국수어법의 실천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농인이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다섯째, 수어에 대한 체계적인 언어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수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수립·시행, 한국수어심의회 및 수어연구소 설치 등 한국수어에 대한 체계적인 언어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어의 유지·발전을 위해 농인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마련하였다(법안 제14조). 농인의 정체성은 수어 사용이 핵심이지만 농인교육의 현장에서 수어 사용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과 시책들을 제시하였다. 이 부문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 할 것이다.

2. 농인의 인권환경 및 정책 변화 기대

농인은 음성언어인 한국어를 대신하여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여 왔으나, 우리 사회의 수어 사용 환경이 미비하여 한국수어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정보이용·학습 등에 많은 제약이 있어왔다. 이러한 결과는 농인으로 하여금 교육, 취업 및 일상생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겪게 되고 사회적 소외계층이 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농인의 인권환경이 열악한 주요 원인이 수어 사용 환경이 구축되지 않음에 기인한다고 볼 때, 「한국수어법」 제정을 통하여 수어 사용 환경을 변화·발전시켜나간다면 농인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농인의 인권환경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지만, 이를 점차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한국수어의 법제도적 환경 마련
- 농사회의 농문화 정체성 변화 견인
- 농인의 언어권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인한 교육환경 변화 기대
- 농인들의 언어권 및 문화향유권 등 기본적 권리 신장

이러한 본 연구의 기대효과들이 정책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 김승국 외 3인, 청각장애 아동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2006.
- 교육부 장학자료(1991), 한글식 표준 수화, 교육부.
- 권재일·윤병천·김용범·이미혜(2009), 청각장애인의 언어 사용 실태,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
- 김만영(2009), 한국수화의 부정어에 대한 연구, 한국수화의 새로운 조명(제11회 한국수화학회 학술대회), 43-65, 한국수화학회.
- 金承國(1983), 韓國手話의 心理言語學的 研究, 博士學位請求論文, 成均館大學校大學院.
- 김칠관 외 11명(1995), 수화통역 개입의 제도화를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한국농아복지회·수화통역대책위원회.
- 김칠관(1998), 한국수화 어원연구, 인천성동학교.
- 김칠관(1999a), 이디엄 현상을 중심으로 본 한국수화의 의미구조, 수화연구, 2호, 2-17.
- 김칠관(2005a), 수화교육의 전향적 검토 재론, 수화교육의 발전 방안(한국수화학회 제7회 학술대회), 5-21.
- 김칠관(2008), 한국수화와 수화언어 환경, 수화연구, 새로운 도약을 위한 모색(제10회 한국수화학회 학술대회), 9-16.
- 김칠관(2009), 한국수화 백 년의 회고, 한국수화의 새로운 조명(제11회 한국수화학회 학술대회), 9-26.
- 김칠관·윤병천(2011a), 응용언어학개론, 파주: 양서원.
- 김칠관·윤병천(2011b), 수화통역학개론, 파주: 양서원.
- 남기현(2012), 한국수화의 기호학적 연구-분류사구문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청구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민은주(2009), 제2언어로서의 수화가 농청년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석사학위 청구논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 박정란(2009), 농인의 수화사용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평택대학교 대학원.
- 변강석(2012), 한국수어에서 나타난 A형과 I형의 문법적 기능, 석사학위 청구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서도원(2007), 충남 아산(온양) 지역 수화의 어휘 특성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 서준환(2003), 한국수화의 지역 차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

- 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손성렬(2010), 손성렬의 수화문법이야기, 대구: 천금출판사.
- 안영희(2004), 한국 농인사회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 안성우(1997), 문법수화가 언어인가?, 난청과 언어장애 20(2), 49-65, 한국재활과학회
- 원성옥(2002), 농아동의 수화언어습득과 언어교육,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1(2), 77-100,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 양정숙(2007), 한국수화의 부정표현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 윤병천(2005), 국내 수화 연구의 동향 분석,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6(1), 19-36,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 장진석(2006), 한국수화의 언어적 특성에 따른 국어 대응식 수화의 문제점 분석,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7(2), 107-125,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 정운기(2005), 농아동의 이중언어습득에 관한 제반요소 탐색, 200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장애학생을 위한 다중문화교육의 이해에 관한 국제회의), 대구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159-171.
- 홍성은(2008), 한국수화의 일치동사, 수화연구, 새로운 도약을 위한 모색(제10회 한국수화학회 학술대회), 46-70, 한국수화학회.
- 市田泰弘(2005), 手話の言語學, 月刊言語, 34: 1-12, 大修館書店.
- イ・ヨンスク(2006), 手話言語と言語政策, ろう教育が変わる!, 全國ろう兒をもつ親の會, 東京: 明石書店, 10-39.
- 岡 典榮·赤堀仁美(2011), 文法が基礎からわかる 日本手話のしくみ, 東京: 大修館書店.
- 神田和幸(2010), 手話の言語的特性に関する研究, 東京: 福村出版.
- 木村晴美(2007), 日本手話とろう文化, 東京: 生活書院.
- 木村晴美·市田泰弘(2000[1995]), ろう文化宣言, ろう文化(現代思想編輯部編), 東京: 青土社, 8-17.
- 言語權研究會編(2004), ことばへの權利, 東京: 三元社.
- 全國ろう兒をもつ親の會編(2004), ろう教育と言語權, 東京: 明石書店.
- 古石篤子(2012), 言語教育政策のこれから, ろう者から見た「多文化共生」(佐々木倫子編), 東京: ココ出版, 252-280.
- 武居 渡(2005), 手話はどのように獲得されるのか, 手話の心理學入門(長南

- 浩人編), 49-75, 東京: 東峰書房.
- 武居 渡・鳥越隆士(2000), 聾兒の手話言語獲得過程における非指示ジェスチャーの役割, 発達心理學研究 11(1), 12-22.
- 小嶋 勇(2012), 言語權をめぐる道のり, ろう者から見た「多文化共生」(佐々木倫子編), 東京: ココ出版, 78-92.
- 齊藤くるみ(2003), 脳神経言語學の発達と手話の社會的地位向上, ことばと社會, 7, 154-157.
- 齊藤道雄(2000), もうひとつの手話-ろう者の豊かな世界, 東京: 晶文社.
- 武居 渡(2005), 手話はどのように獲得されるのか, 手話の心理學入門(長南浩人編), 49-75, 東京: 東峰書房.
- 鳥越隆士(1995), ろう兒はいかに手話を學ぶか -第一言語としての手話の習得過程, 日本手話學會手話研究モノグラフ 5.
- 鳥越隆士(2001), 手話・ことば・ろう教育, 東京・京都: 日本手話研究所.
- 鳥越隆士(2008), 手話の獲得, 新・子どもたちの言語獲得(小林春美・佐々木正人編), 233-258, 東京: 大修館書店.
- 文部科學省(2009), 特別支援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自立活動 編, 東京: 海文堂.
- 日本辯護士連合會(2005), 手話教育の充實を求める意見書, ろう教育が変わる!, (全國ろう兒をもつ親の會編), 明石書店, 174-211.
- 正高信男(2001), 子どもはことばをからだで覚える, 東京: 中央公論社.
- 堀田凱樹・酒井邦嘉(2007), 遺傳子・脳・言語, 東京: 中央公論社.
- Aronoff, M., Meir, I., and Padden, C.(2004), Morphological universals and the signlanguage type. Geert Booij and Joap van Marle(eds), *Yearbook of Morphology*.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39.
- Baker-Shenk, C. & Cokely, D.(1999[1980]), *American Sign Language: a teacher's resource text on grammar and culture*. Gallaudet University Press.
- Bauman, H.-D. L.(2004), Audism: Exploring the metaphysics of oppression,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9, 239-246.
- Bickford, A.(2005), The Signed Language of East Europe, SIL.
- Council of Europe(2005), *The status of sign language in Europe*,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Cummins, J.(2011), Education for the Deaf in the 21st Century: How to promot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through biliteracy education? www.com-sagano.com/jisls/publications/koen.html (일본에서의 강연

자료)

Hilde Haualand and Collin Allen compiled(2009), *Deaf People and Human Rights*, WFD and Swedish 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 www.wfdeaf.org/wp-content/uploads/2011/06/Deaf-People-and-Human-Rights-Report.

Holcomb, T.(2012), *Introduction to American Deaf Culture*, Oxford

Hurlbut, Hope M. 2000. A preliminary survey of the signed languages of Malaysia, Published in SIL Electronic Survey Reports 2008 - -001.

www.signwriting.org/archive/docs6/sw0593_SignLanguages_Malaysia_Hurlbut.pdf University Press.

Johnston, T. and Schembri, A.(2007), *Australi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Lane, H(2005), Ethnicity, Ethics, and the Deaf-World,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10:3 Summer, 291-310.

Liddell, S. & Johnson, R.(1989), American Sign Language: the phonological base. *Sign Language Studies*, 64, 195-277.

Mckee, R.(2006), The Eyes Have It! Our Third Official Language: New Zealand Sign Language, *Journal of New Zealand Studies*, 129, 129-148.

Meir, I. and Sandler, W.(2008), *A language in space: the story of Israeli Sign Language*,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Newport, E.(1990), Maturation constraints on language learning, *Cognitive Science* 14(1), 11-28.

Padden, C.(1989[1980]), The Deaf Community and the Culture of Deaf People, Wilcox, S. (ed.), *American Deaf Culture: Anthology*, Burtonsville, Maryland: Linstok Press, 1-16.

Padden, C., & Humphries, T.(1988), *Deaf in America: voices from a culture*, 森 外譯(2003), 「ろう文化」案内, 東京: 晶文社.

Padden, C., & Humphries, T.(2005), *Inside Deaf Cul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Paddy Ladd(2003), *Understanding Deaf Culture: In Search of Deafhood*, 森監譯(2007), ろう文化の歴史と展望, 東京: 明石書店.

Paddy Ladd(2013), Sign language peoples and the significance of recognition of Deaf culture.

<http://downloads.royalsociety.org/events/2013/digita-lingua/2013-02-28>

-Paddy_Ladd presentation.pdf

- Papasprou, Chrissostomos & Alexander von Meyenn & Michaela Matthaei & Bettina Herrmann(2008), *Grammatik der Deutschen Gebärdensprache aus der Sicht gehörloser Fachleute*(Gebärdensprachlehre 6), Seedorf: Signum.
- Petitto, L. A. and Marenette, P. F.(1991), Babbling in the manual mode: Evidence for the ontogeny of language, *Science* 251, 1493-1498.
- Poizner, H., Bellugi, U. & Klima, E. 1987. *What the hands reveal about the brain*. 河内十郎 監譯(1996), 手は脳について何を語るか, 東京: 新曜社.
- Sacks, Oliver.(1990[1989]). *Seeing Voice: a journey into the world of the Deaf*. 佐野正信譯(1996), 手話の世界へ, 東京: 晶文社. (황지선 옮김, 2004, 나는 한 목소리를 보네, 서울: 가톨릭출판사.)
- Sakai, K., Tatsuno, Y., Suzuki, K., Kimura, H. and Ichida, Y.(2005), Sign and Speech: amodal commonality in left hemisphere dominance for comprehension of sentences. *Brain* 128(6), 1407-1417.
- Sandler, Wendy(1989), *Phonological representation of the sign: linearity and non-linearity in American Sign Language*, Dordrecht: Foris Publications.
- Sandler, Wendy and Lillo-Martin(2006), *Sign Language and Linguistic Universa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ulze, M.(2010), Understanding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ndicap International.
[www.handicap-international.fr/fileadmin/documents/publications/HICR PD/manual.pdf](http://www.handicap-international.fr/fileadmin/documents/publications/HICR_PD/manual.pdf)
- Senghas, R. & Monaghan, L.(2002), Signs of Times: Deaf Community and the culture of languag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1, 69-97.
- Skutnabb-Kangas(2003), *Linguistic genocide and the Deaf*, 中村 成子譯 (2004), 言語抹殺とろう者, 全國ろう児をもつ親の會編, ろう教育と言語權, 155-195.
- Stokoe, W. C. Jr. 1960. Sign Language Structure: an outline of the visual communication systems of the American deaf. *Studies in Linguistics*, Occasional Papers Buffalo: University of Buffalo.
- Sutton-Spence, R. and Woll, B.(1999), *The linguistics of British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UNCRPD Secretariat(2009), Compilation of legislative measures undertaken in the implementation of CRPD.

www.un.org/disabilities/default.asp?id=1487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y

www.un.org/disabilities/documents/convention/convoptprot-e.pdf

Verena Krausneker(2008),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sign languages and the rights of their users in Council of Europe member states: need analysis.

www.coe.int/t/e/social_cohesion/soc-sp/Report%20Sign%20languages%20final.doc

WFD(2011), 16th World Congress of the World Federation of the Deaf.

<http://wfdeaf.org/news/congress-resolution>

Yvonne Donders(2006), Cultural diversity and human rights: Towards a rights to cultural identity?(문화다양성과 인권: 문화정체성을 위한 권리인가?), International Forum on Cultural Rights and Diversity(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 121-135.

孫桂華・劉秋芳(2007), 烟台啓喑, 濟南: 山東電子音像出版社.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추진위원회(2005), 한국수화사전, 문화관광부·한국농아인협회.

뉴질랜드 수화언어법(2006)

www.legislation.govt.nz/act/public/2006/0018/latest/096be8ed802280f3.pdf

헝가리 수화언어법(2009)

www.fszk.hu/fszk/tudastar/jogszabaly/hazai/A_jelnyelvi_torveny_angolul.pdf

아이슬란드 수화언어법(2011)

www.eng.menntamalaraduneyti.is/media/MRN-pdf/Icelandic-Language-Act-tr-260711.pdf

말레이시아 장애인법(2008)

www.rehabmalaysia.org/wp-content/.../PwD-Act-2008.pdf

일본 수화언어법(안)

www.jfd.or.jp/sgh

카탈루냐 수화언어법(2010)

www.parlament.cat/departaments/docs/30051118285558.doc

핀란드 헌법

www.finlex.fi/fi/laki/kaannokset/1999/en19990731.pdf

<부록>

한국수어법안

<제안이유>

농인은 음성언어인 한국어를 대신하여 한국수어(Korean sign language)를 제1언어로 사용하여 왔으나, 우리 사회의 수어 사용 환경이 미비하여 한국수어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정보이용·학습 등에 많은 제약이 있었음. 이러한 결과는 농인으로 하여금 교육, 취업 및 일상생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겪게 되고 사회적 소외계층이 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현행법상으로는 「국어기본법」에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인의 경우에는 국어와 다른 형식의 언어인 시각·동작체계의 수어(sign language)를 제1언어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수어를 법제도화하여 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수어(수화)통역을 제공하는 규정들이 있어 의사소통수단을 지원하는 근거로서는 의미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수어를 공용어로 선언하고, 한국수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권리를 인정하여야 할 것임.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어(signed languages)는 음성언어와는 다른 언어형식을 지니는 수어의 개별성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따라서 농인들의 교육권, 사회권 등 인권은 제1언어 또는 모어로서 언어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전제로 함. 또한 국제적으로는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어를 법률로 공인하거나 공용어로 인정하는 나라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자격의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한국수어의 보급·발전과 농인의 교육·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의 참여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이 법은 농인이 일상생활의 언어로 사용하는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언어임을 선언하고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의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언어권을 신장하고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한국수어’란 한국 농인의 공용어이며, 한국 농인의 사회·문화 속에서 시각·동작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한국어와 다른 고유한 형식의 언어로 정의함(안 제2조 및 제3조제1호).
- 다. 한국수어는 농인의 제1언어이므로 농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모든 정책 수립에 반영되어야 하고, 농인은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 라. 농인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 권리가 모든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안 제4조제4항), 농인등은 다양한 대체 의사소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됨(안 제4조제5항).
-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중장기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한국수어연구소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12조제1항).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한국수어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 아. 한국수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과 그 발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수어심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에서의 한국수어에 의한 교육을 지원·촉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농인 교사 또는 한국수어를 사용하여 교육이 가능한 교사를 배치하여야 함(안 제14조제1항).
-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학습언어로 사용하며 한국수어를 교육과정에 포함하여야 함(안 제14조제2항).
- 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를 배우고자 하는 국민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며, 한국수어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농인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고, 교육기관, 사업장 등에서도 수어통역 지원을 보장하여야 함(안 제17조).
-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한국수어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인이 일상생활의 언어로 사용하는 한국수어가 음성언어인 국어기본법 제3조제1호의 국어와 다른 형식의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인정하고,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의 기본적인 권으로서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용어) ① 한국수어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농인의 언어 선택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사회·문화 속에서 시각·동작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국어와 다른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유사수어체계”란 의사소통의 한 수단으로 국어 문법형식에 한국수어 단어를 대응시킨 인위적인 체계를 말한다.
3.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사회·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생활의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사회·문화”란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및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한국수어를 일상생활의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이 농사회·문화 속에서 가지는 일체감 또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농인이 사용하는 한국수어를 음성언어인 국어로 변환하거나 음성언어인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4조(기본이념 및 원칙) ①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 공동체를 기반으로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한국수어는 농인의 제1언어이므로 농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모든 정책 수립에 반영되어야 한다.

③ 농인은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

(이하 “모든 생활 영역”이라 한다)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농인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 권리가 모든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농인을 포함한 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등(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은 한국수어 및 유사수어체계 등(이하 “한국수어등”이라 한다)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제5조(법의 해석 및 적용) 국가는 이 법의 규정이 「장애인권리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의 내용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등의 책무) ① 공공기관등은 한국수어의 진흥을 위한 지원·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및 촉진·발전을 위한 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수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 등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과 협력하여야 하고, 제13조에 따른 한국수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모든 생활 영역에서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의 통역과 한국수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남북한 수어의 교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의 발전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한국수어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한국수어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법령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정부는 2년마다 한국수어의 진흥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당해 연도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한국수어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수집이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한국수어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한국수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제12조(한국수어의 연구 및 교육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한국수어연구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한국수어연구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수어 관련 법인·단체에게 한국수어교육원을 위탁 또는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된 한국수어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 또는 지정된 한국수어교육원이 그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의 위탁 또는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한국수어심의회) ① 한국수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과 그 발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수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회를 설치하는 때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기능 및 성격,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운영방법, 설치방법·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교육과 한국수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에서의 한국수어에 의한 교육을 지원·촉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농인 교사 또는 한국수어를 사용하여 교육이 가능한 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그 배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학습언어로 사용하고 한국수어를 교육과정에 포함하여야 하며, 그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한국수어 및 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에 의한 학습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이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를 제작 및 보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사와 학부모의 한국수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위 제1항부터 제6항을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한국수어의 사용 및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수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간 대중매체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에 의한 문화·예술 활동 및 각종 체육활동을 장려·지원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한국수어의 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급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농인등은 수어통역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농인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교육,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에서 농인에게 수어통역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에서 농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수어통역 지원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수어통역을 지원할 때에 농인의 요청이 있고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어체계, 실시간 문자통역 및 속기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⑥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자격 인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에 대하여 한국수어등의 의사소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한국수어의 날) 정부는 한국수어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한국수어의 날을 정하여 기념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사용의 촉진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0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수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

의하여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과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용어 개정) 다른 법률에서 규정된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한국수어법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세부사항 등) ① 「한국수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국민의 한국수어 능력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한국수어 의식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 사용 환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국민의 한국수어 사용 등의 실태
 - 나. 국민의 한국수어를 통한 경어·외래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등의 사용 실태
 - 다. 신문·방송·잡지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한국수어 사용 실태
 - 라. 영화·광고 등의 한국수어 사용 실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실태 조사 업무의 일부를 수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한국수어연구소의 설치·운영) ① 법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연구소는 「정부조직법」 제4조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속기관으로 본다.

② 한국수어연구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제4조(한국수어교육원의 위탁·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위탁 또는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갖추는 것
 - 가. 상근 책임자 1명: 한국수어 관련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거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의 수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상담소, 수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5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 나. 상근 교육강사 2명 이상: 한국수어 관련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대학의 수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상담소, 수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3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2. 강의실, 상담실 및 행정실 등의 시설을 갖추 것

②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서식의 한국수어교육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자치구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수어교육원 운영계획서

2.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을 적은 서류

③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전년도 교육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한국수어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

2. 한국수어연구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과 그 발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수어심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어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농인을 포함하여 수어학, 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농인 위원의 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어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⑧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⑨ 심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그 밖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교육과 한국수어) 법 제14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농학교에서의 교사 배치 기준과 방법, 농학교 교육과정의 적용기준, 농학교 교과용 도서의 제작 및 보급 등 농학교 교육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특수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인을 대상으로 수어를 가르치는 사람(이하 "한국수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교원 1급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시간 이상 한국수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수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2. 한국수어교원 2급

가. 한국수어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수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1천2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3. 한국수어교원 3급

가. 한국수어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수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2. 수어통역기관 및 수어 관련 단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을 받아서 발급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한국수어능력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적인 한국수어 사용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②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0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 등) ① 「장애인복지법」 제71조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55조에 의한 수화통역사는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으로 본다.

- ②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인증에 관하여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의해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에 따른다.

제11조(수어통역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와 [별표4]에 의하여 설치하는 수화통역센터는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수어통역센터로 보며, 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한국수어의 날 기념) ① 정부는 법 제18조에 따라 수어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한국수어의 날을 정하여 매년 기념할 수 있다.

- ② 한국수어의 날을 정하여 기념하는 경우에 정부는 기념행사를 할 때에 한국수어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를 한국수어발전유공자

로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은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국수어법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수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수어심의회의 농인 위원 비율) 「한국수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한국수어심의회의 농인 위원의 비율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조(한국수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 위원은 한국수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한국수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등) ①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별지 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와 한국수어교육 경력증명서는 각각의 별지 서식에 따른다.

1.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수어교육 경력증명서
2. 영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3. 영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4. 영 제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

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5. 영 제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한국수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②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한국수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및 공고) ① 영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자격의 심사는 연 2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수어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자격의 심사를 시행하기 3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한국수어교원 자격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기관의 범위) 영 제9조에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4.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